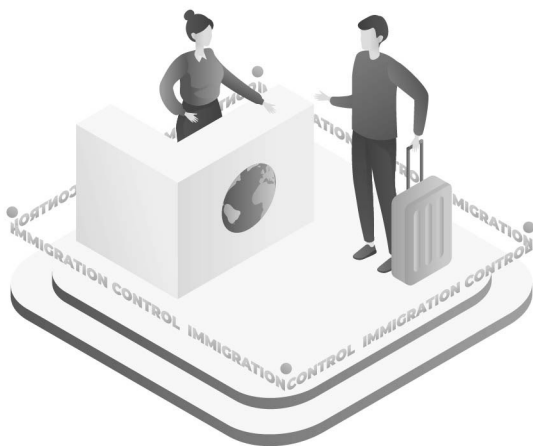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인구위기 시대, 지역이민정책의 형성과정과 도전과제

일시 | 2024. 6. 18.(화) 14:00-17:30

장소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마곡)



주최 |  법무부

주관 |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MRTC
Partner Organization of IOM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인구위기 시대, 지역이민정책의 형성과정과 도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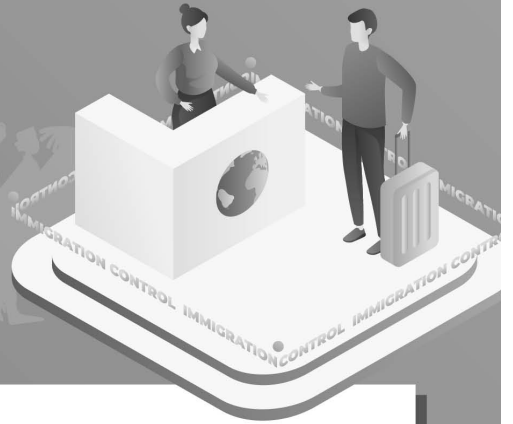
일시 | 2024. 6. 18.(화) 14:00-17:30

장소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마곡)

주최 | 법무부

주관 |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Partner Organization of IGM
MRTC

※ 참석하실 분은 사전등록(QR코드 확인) 또는 현장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안내 |

시간	내용	사회/좌장
14:00~14:20 20'	등록 및 개회 개회사 이규홍 부원장 이민정책연구원 환영사 이재유 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수영 실장 이민정책연구원
14:20~15:30 70'	제1세션 지역이민정책의 형성과정 발표 1 이민규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서울시 외국인정책 변천과정과 특징 발표 2 전희진 · 이주연 책임연구원 전북연구원 전북지역 이민정책 추진기반 구축 현황 및 특례조항 발표 3 양철 연구위원 강원연구원 강원자치도 이민정책 현황과 방향 토론 1 이혜진 연구위원 경남연구원 토론 2 고보혜 선임연구원 광주여성가족재단 토론 3 김대성 사회문화연구실장 · 김현민 부연구위원 전남연구원	강동관 박사 前이민정책연구원장
15:30~15:40 10'	휴식	
15:40~16:50 70'	제2세션 지역이민정책의 도전과제 발표 1 박민정 연구위원 이민정책연구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민정책 특성과 과제 발표 2 김영혜 정책연구실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 분포와 정책방향 발표 3 김수한 연구위원 인천연구원 재외동포와 연계한 인천의 인구정책 구상 토론 1 양원택 부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 2 이정우 선임연구원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토론 3 김혜정 복지가족정책연구팀장 울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임동진 교수 순천대학교
16:50~17:30 40'	제3세션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운영방안 패널 1 류형철 공간환경연구실장 경북연구원 패널 2 윤향희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패널 3 이종철 과장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전체 참석자 참여	조영희 박사 이민정책연구원
17:30~17:35 5'	폐회	

Contents

개회식 14:00~14:20

사 회: **이수영** 실장 | 이민정책연구원

개회사: **이규홍** 부원장 | 이민정책연구원 vi

환영사: **이재유** 본부장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viii

제1세션 14:20~15:30 지역이민정책의 형성과정

좌 장: **강동관** 박사 | 前이민정책연구원장

발제1: 서울시 외국인 정책 변천과정과 특징 3
이민규 연구위원 | 서울연구원

발제2: 전북 이민정책 추진기반 구축 현황 및 특례 조항 11
전희진 · **이주연** 책임연구위원 | 전북연구원

발표3: 강원자치도 이민정책 현황과 방향 19
양철 연구위원 | 강원연구원

토론1: **이혜진** 연구위원 | 경남연구원 27

토론2: **고보혜** 선임연구위원 | 광주여성가족재단 31

토론3: **김대성** 사회문화연구실장 · **김현민** 부연구위원 | 전남연구원 34

제2세션 15:40~16:50 **지역이민정책의 도전과제**

좌 장: **임동진** 교수 | 순천향대학교

발표1: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민정책 과제

박민정 연구위원 | 이민정책연구원..... 39

발표2: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 분포와 정책 방향

김영혜 정책연구실장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57

발표3: 인천의 인구·재외동포 정책 동향 및 관련 구상

김수한 연구위원 | 인천연구원..... 69

토론1: **양원탁** 부연구위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81

토론2: **이정우** 상임연구위원 |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84

토론3: **김혜정** 복지가족정책연구팀장 | 울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88

제3세션 16:50~17:30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운영방안**

좌 장: **조영희** 연구위원 | 이민정책연구원

패널1: **류형철** 공간환경연구실장 | 경북연구원..... 91

패널2: **윤향희** 책임연구위원 | 충남연구원..... 99

패널3: **이종철** 과장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01

전체 참석자 참여

개회사



이규홍 부원장
(이민정책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이민정책연구원 이규홍 부원장입니다.

오늘 제 17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인구위기 시대, 지역이민 정책의 형성과정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전국의 지역정책연구기관의 연구자들과 우리 이민정책연구원이 함께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재유 본부장님, 반재열 단장님,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前 원장님, 한국이민정책학회 임동진 차기 학회장님, 그리고 실제 지역이민 정책 추진 일선에 계신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기반 이민 정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더 많은 정책개발의 아이디어를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지역기반이민정책 수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계십니다.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지역거주 외국인주민 실태조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압니다. 외국인주민을 지역 인구로서 어떻게 유입하고, 통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이민정책연구원은 법무부, 전국의 지역연구기관과 함께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출범에 참여하고, 운영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포럼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역기반이민정책' 연구 개발에 매우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포럼이 정부의 제4차 외국인정책 추진과제로도 포함된 '지역이민정책연구 네트워크' 사업의 주요 내용인 연구개발과 협력 활동을 실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이민정책 연구를 주도해 온 이민정책연구원과 지역연구에 전문성을 갖춘 지자체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서로의 연구 강점을 결합하여, 중앙과 지방 간 일관된 이민정책을 개발하는 데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지역이민정책 관련 핵심 의제들이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중앙-지방 실무분과위원회'에 전달되도록 하는 등 정책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의 연구와 토론의 결과가 실제 정책기획과 추진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바쁜 시간을 내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허심탄회하게 좋은 생각들을 나누어주시고, 모든 분들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이 규 흥

환영사



이재유 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재유입니다.

「제17회 세계인의 날 이민정책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번 포럼을 주최하신 이민정책연구원의 이규홍 부원장님
을 포함하여 지역이민정책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지자체 공무원
분들과 지역연구원 소속 연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인구위기 시대, 지역이민정책의 형성과정
과 도전과제’로 ‘지자체의 이민정책 추진 방향’, ‘지역 이민정책의
도전과제’ 등의 논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이민정책에 대한 미래 방향을 계획하는
장입니다.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지역인구소멸에 맞서 인구정책을 보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데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민정책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도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법무부는 작년 11월 중앙부처·지자체는 물론 학계, 연구계가 함께하는 「지역이민
정책 연구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오늘 첫번째 포럼을 제17회 세계인의 날을 계기로 개최하게 되었
습니다.

지난 5월, 「외국인정책위원회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다문화도시협의회」 등을 통해
광역·기초지자체의 이민정책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습니다.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수적인바, 오늘 포럼에서 지역이민정책 연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지자체의 이민정책 역량 강화와 중앙과의 협력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지역이민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네트워크 연구결과와 다양한 지자체 의견이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이민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포럼이 우리나라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방향성과 현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재 유

제1세션

지역이민정책의 형성과정

좌 장: 강동관 박사 | 前이민정책연구원장

발표1: 서울시 외국인 정책 변천과정과 특징
이민규 연구위원 | 서울연구원

발표2: 전북 이민정책 추진기반 구축 현황 및 특례 조항
전희진 · 이주연 책임연구위원 | 전북연구원

발표3: 강원자치도 이민정책 현황과 방향
양 철 연구위원 | 강원연구원

토론1: 이해진 연구위원 | 경남연구원

토론2: 고보혜 선임연구위원 | 광주여성가족재단

토론3: 김대성 사회문화연구실장 · 김현민 부연구위원 | 전남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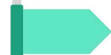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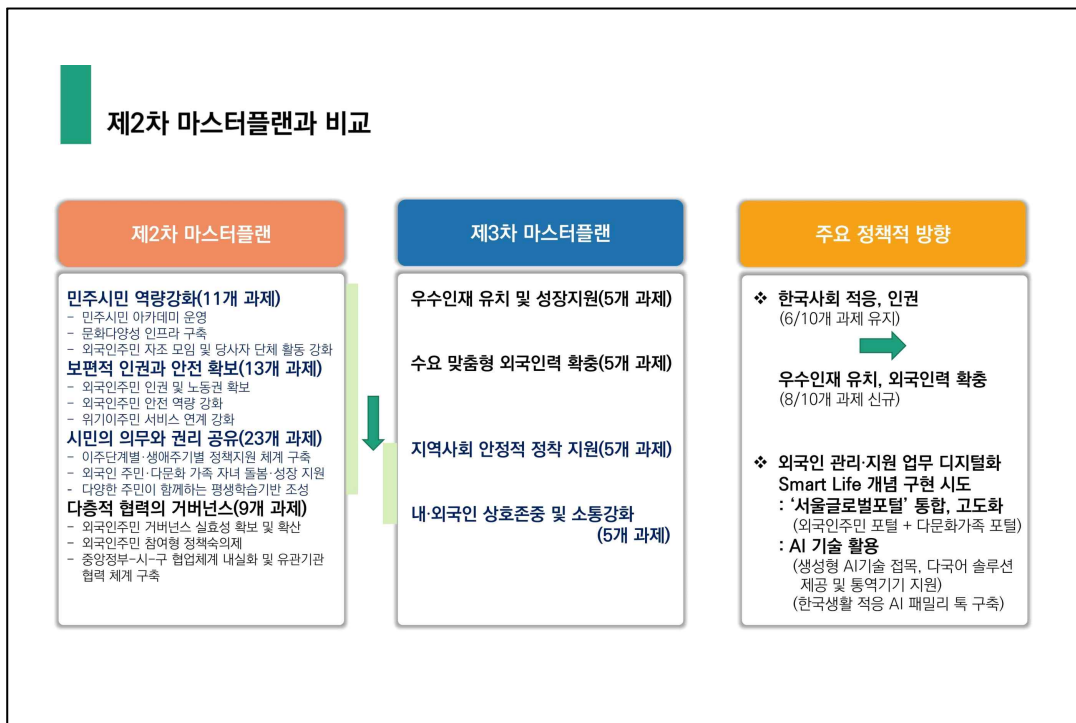


서울시 외국인 정책 변천과정과 특징

발표자 서울연구원 이민규 연구위원

목차

-   제3차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   제2차 마스터플랜과 비교
-   마스터플랜 수립 배경
-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
-   거버넌스 구조와 조직 개편



마스터플랜 수립배경

1위
다양해지는 서울시민 구성원

서울시민 21명 중 1명이 외국인

- 서울시 외국인주민 44만명 (서울인구의 4.7%)
- ✓ 서울외국인근로자 4.4만명
- ✓ 외국인유학생 급증 7.5만명
- ✓ 외국인주민자녀 3.6만명
- 외국인주민 비율
- ✓ 5%이상 자치구 10개, 10%이상 자치구 4개
- 국적 체류자격 다양화, 중국국적자 비율 감소
- ✓ 증가: 베트남(6%), 태국(4%), 북미(9%), 유럽(9%) 등
- ✓ 감소: 중국(60%)

2위
치열해지는 인재유치 경쟁

해외 주요국가, 외국인력 영입 10년간 2배 이상 증가

- 외국인 유학생 증가, 취업·국내정착은 저조
- ✓ 높은 유학생 비율 : 8.7만명(서울 2.9만명)(2021년) → 17만명(서울 7.5만명)(2022년)
- ✓ 저조한 취업률 : 본국귀국 19%, 국내취업 8%
- ✓ 박사학위 취득 후 본국 귀국 비중 : 41%(2016) → 62%(2021)
- ✓ 외국인 기술창업자수 매우 저조 : 0.01%, 118명
- 서울 산업인력난 심화
- ✓ 중소기업 기술 연구 서비스 부족인력 4만명
- ✓ 첨단산업인재 27년까지 35만명 부족 전망
- ✓ 도소매, IT·과학·기술·숙박·음식업 등 부족인력 14.3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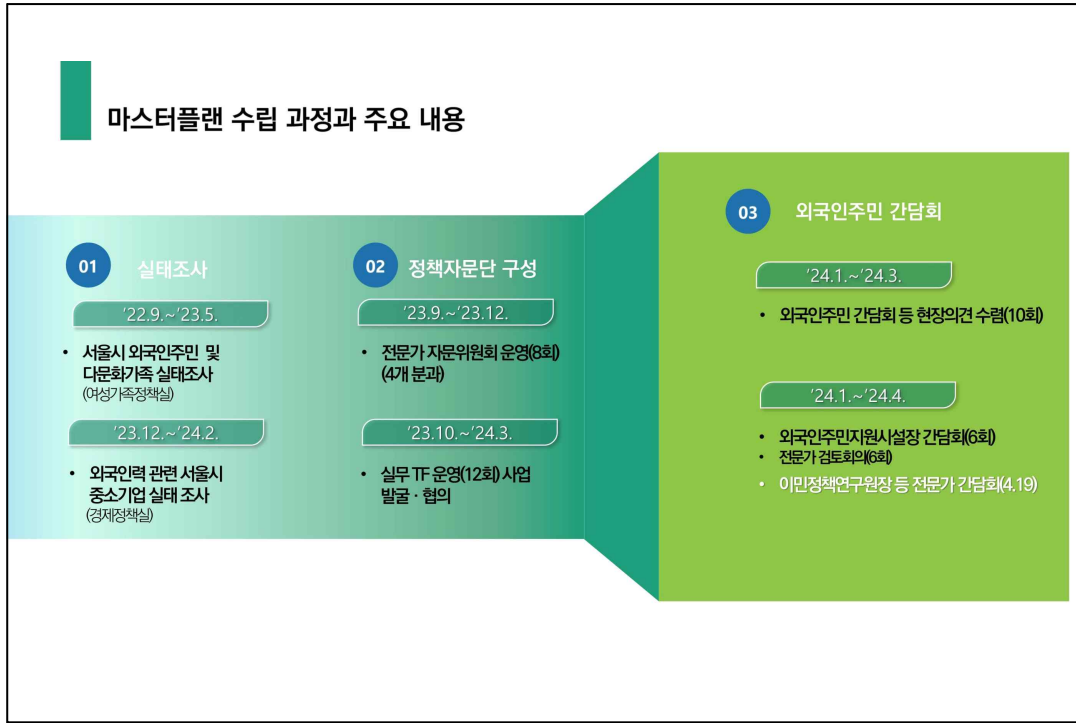
3위
외국인주민에 대한 낮은 포용성

외국인주민 애로사항

- 1위: 자녀 양육 및 교육
- ✓ 교육비 부담, 교육진입 장벽
- 2위: 경제활동기회 획득
- ✓ 정규직 하늘의 별따기
- 3위: 주거공간 확보
- ✓ 집 걱정, 계약 걱정
- 문화 갈등, 낮은 다문화수용성
- ✓ 다문화수용성 지수 하락 : 52.81(2018년) → 52.27점(2021)
- 배려, 포용성 만족도 낮고, 소속감 낮음
- ✓ 전국 3.63점 대비 서울 3.56점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

실태조사(외국인주민 애로사항)

자녀 양육 및 교육

교육비 부담, 교육 진입장벽

- 어려운 한국어
- 자녀학업, 진로 정보 부족



유대관계 및 편견·차별

- 한국인과 유대 관계 약함
- 사회적 편견·차별 존재

경제 활동 기회 획득

정규직, 하늘의 별따기

- 취업 기회 절실
-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불안



- 1위 출신 국가 47.2%
- 2위 한국어 능력 40.9%
- 3위 외모 36.1%

주거공간 확보

집 걱정, 계약 걱정

- 취약한 주거 환경
- 계약, 행정 등 문화·언어장벽 존재



유학생·우수인력 이탈

- 정주·취창업 정보습득 불편
- 낮은 한국문화 적응 힘듦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

서울연구원 관련 연구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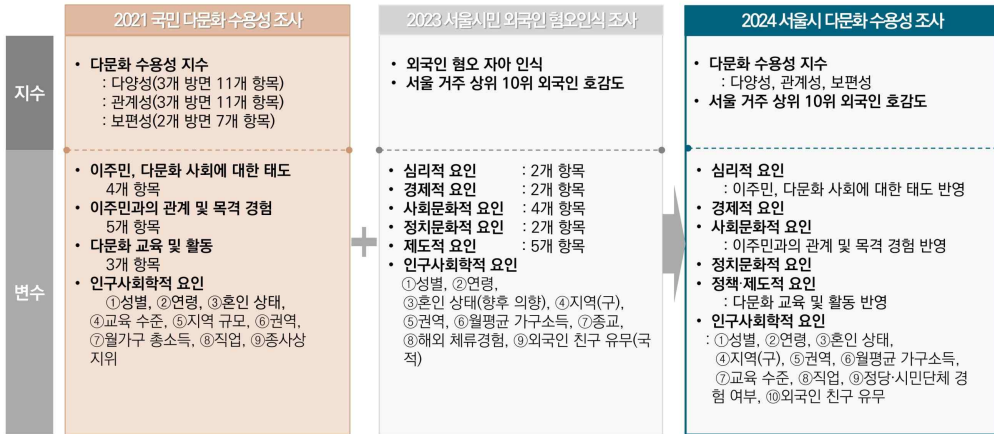
조사대상: 국내 91일 이상 체류 중인 만 20세 이상 서울시 거주 외국인 2,500명
 조사기간: 2021년 9월 6일~11월 8일
 조사내용: 서울에서의 삶의 질, 교통 및 환경, 서울의 물가수준, 문화시설, 건강, 사회교류 및 일상생활, 정보수준, 주거 및 직업 등 32개 항목
 조사방법: 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표본크기: 2,500명
 설문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총 6종 구성

외국인 관련 연구

정주여건 - (수시)외국인과 소통이 편리한 서울(랭귀지 프리 서울) 조성 방안
 정주여건 - (수시)서울시 외국인 정주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외국인 인력 - (현안)서울시 외국인 노동공급과 일자리 수요 현황
 외국인 인력 - (현안)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제도적 현황과 개선방안
 외국인 인력 - (수시)서울 인구감소 시대 외국인력 유치 및 정책 지원 대응방안
 외국인 인력 - (현안)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 쟁점 및 과제
 다문화 수용성 - (정책)서울시 다문화 수용성 현황과 제고 방안 연구
 다문화 수용성 - (정책)서울시 제노포비아 실태와 외국 도시의 대응 정책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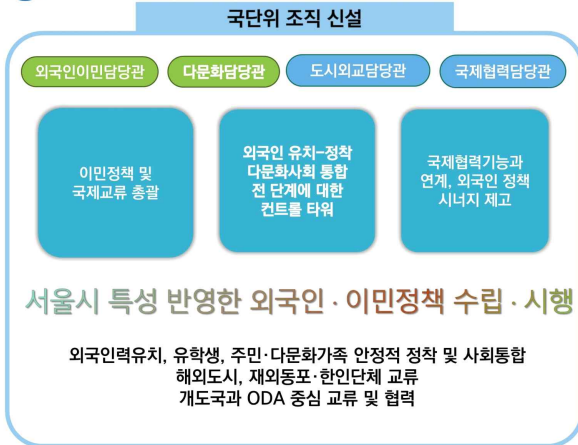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

서울연구원 다문화 수용성 실태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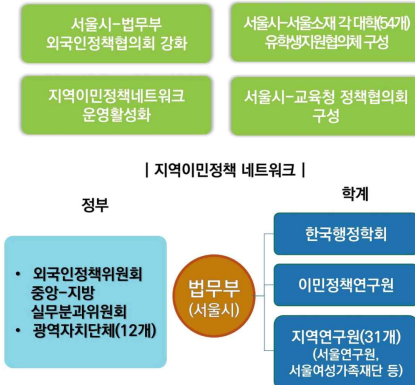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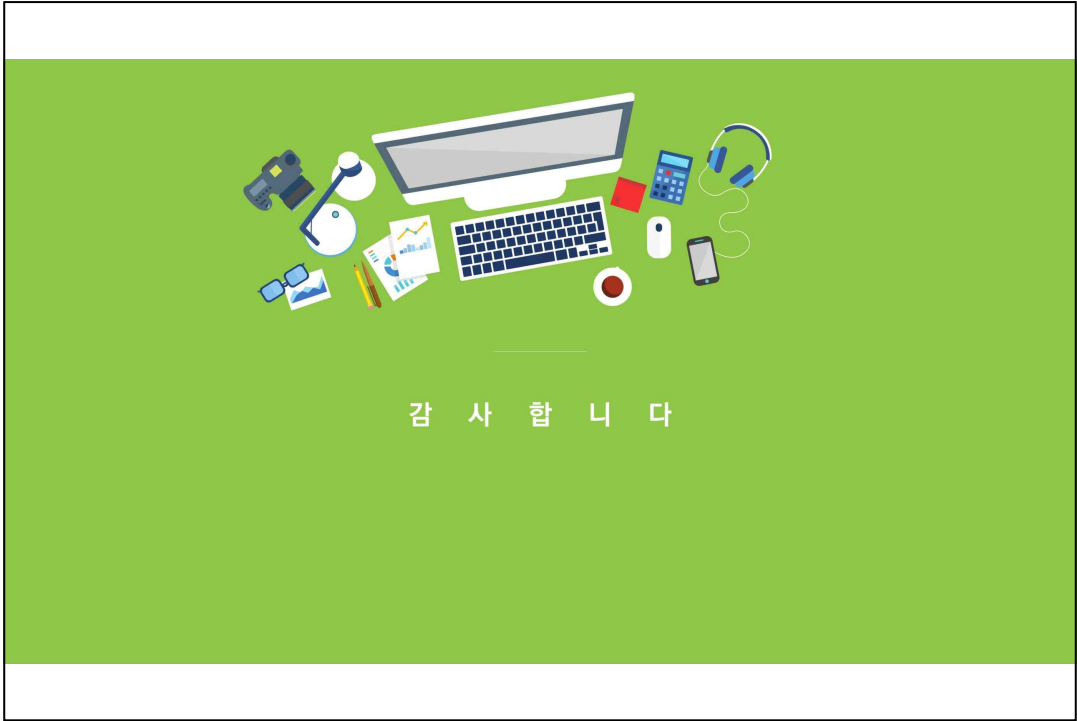
거버넌스 구조와 조직 개편

01 '글로벌 도시 정책관' 신설(1관 4담당관, '24.7)



02 민관학 거버넌스 확대





전북 이민정책 추진기반 구축 현황 및 특례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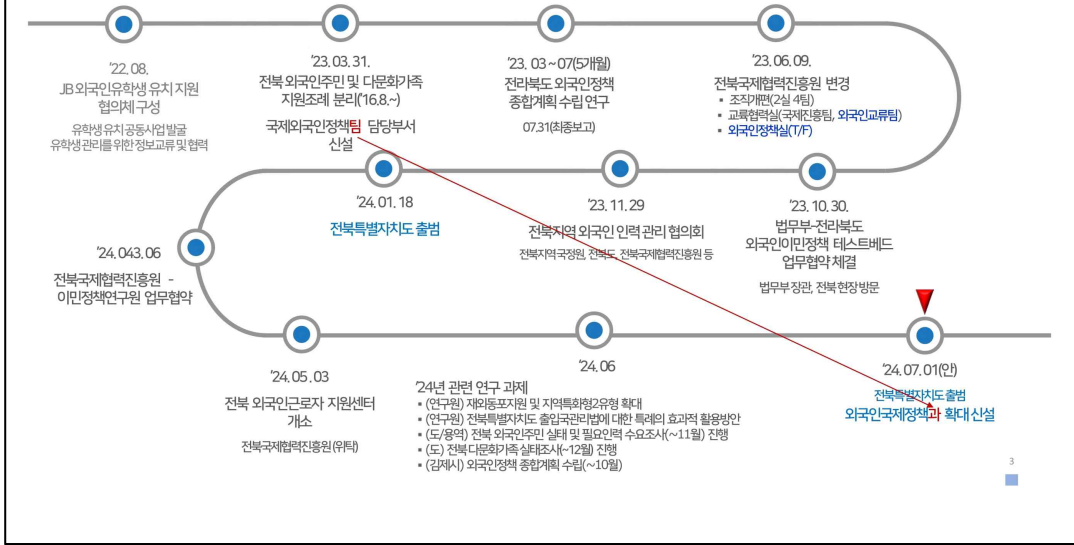
2024. 06. 18. (화)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 전북연구원

CONTENTS

- 1 전북 이민정책 추진 과정 개요
- 2 전북 이민정책 기반 구축 현황
- 3 전북 이민정책 특례 현황
- 4 전북 이민정책의 쟁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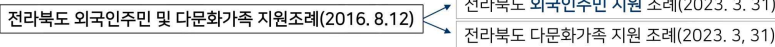
01 전북 이민정책 추진 개요



02 추진 기반 현황 : 조례(1)

✓ 전북자치도 조례 현황

-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2023. 3. 31) 담당부서 **교육소통협력국 대외협력과**



(제2조) 외국인주민: 전북 관내 90일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와 그 자녀
 (제5조)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시행
 → 목표/비전, 지원시책,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 재원확보, 기관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민간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통계·실태 조사 등
 (제7조, 지원범위)
 → 한국어와 기초생활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및 응급구조, 각종문화체육행사 개최, 외국인가정의 보육·교육, 불합리한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권익·인권 보호 및 고충해결위한 센터 운영 지원 등

- 「전라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2. 10. 21) **교육소통협력국 교육협력추진단**

- (제2조) 유학생: 전라북도에 거주,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
 - (제4조) 지원대상: 유학생 + 어학연수생, 단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제외
 - (제5조) 지원사업: 도내 생활 적응 교육, 유학생 장학금 지원, 생활·법률·국내취업 등 상담, 주거지원, 문화체육행사 개최, 유학생 지원 DB구축 및 관리
 - (제6조) 유치확대: 유학생품 개발·홍보 및 설명회 개최, 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박람회 참가 등
 -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지역 대학 - 외국인 지원기관 - 관련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02 추진 기반 현황 : 조례(2)

14개 시군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관련 현황

14시군 중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 현황

- 11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 제정(전주, 김제, 부안 제외)

※ 전주, 김제, 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 군산/임실 매년 '외국인주민지원계획 수립'

· 실태조사, 집중거주지 환경개선, 협조체계 구축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제정 현황

- 3개 시군(익산시, 김제시, 고창군)에서 관련 조례 제정함

→ 고창/김제 : 운영계획, 사전이행사항, 전담인력배치,

지도점검, 재정지원

※ (재정지원) 산재보험료, 통·번역비, 교육비/급·간식비

파견근로사업 운영의 비용, 조기출근 등의 경우 항공료 등

구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군산	(5조) 외국인주민지원계획 수립, (8조)캠프의회 설치, (13조)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설치, (18조)세계인의날, (20조) 명예시민	
익산	(7조) 자문위원의 설치, (12조) 외국인지원단체 지원, (14조) 세계인의날, (17조) 명예시민	(4조)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 (5조) 외국인계절근로자와 고용주 지원
정읍	(7조) 자문위원의 설치, (12조) 외국인지원단체 지원, (14조) 세계인의날, (16조) 명예시민	
남원	(7조) 자문위원의 설치, (12조) 외국인지원단체 지원, (14조) 세계인의날, (16조) 외국인 포상, (17조) 명예시민	
완주	(7조) 자문위원의 설치, (12조) 외국인지원단체 지원, (14조) 세계인의날, (16조) 명예군민	
무주	(7조) 위원회 설치, (15조) 외국인지원단체 지원, (17조) 세계인의날, (19조) 명예군민	
진안	(7조) 위원회 설치, (12조) 외국인지원단체 지원, (14조) 세계인의날, (16조) 명예군민	
장수	(7조) 위원회 설치, (13조) 외국인지원단체 지원, (15조) 세계인의날, (16조) 외국인 포상, (17조) 명예군민	
임실	(4조의 2) 외국인주민지원계획수립(실태조사 등), (7조) 협의의 설치, (12조) 자문위원의 설치, (15조) 외국인 지원단체 지원, (17조) 세계인의날, (18조) 명예군민	
순창	(7조) 자문위원의 설치, (12조) 외국인지원단체 지원, (14조) 세계인의날, (16조) 외국인 표창, (17조) 명예군민	
고창	(7조) 자문위원의 설치, (12조) 외국인지원단체 지원, (14조) 세계인의날, (16조) 외국인 포상, (17조) 명예군민	(3조) 운영계획, (4조) 사전이행사항, (5조) 전담인력 배치, (6조) 재정지원 (7조) 지도·점검
김제		(4조) 운영계획, (5조) 사전이행사항, (6조) 전담인력배치, (7조) 재정지원, (10조) 지도·점검

02 추진 기반 현황 : 추진체계(조직)(1)

전북특별자치도의 조직 현황

교육소통협력국 → 대외협력과 → 국제외국인정책팀 5인 (팀장 1, 주무관 4)

→ 실질적인 외국인정책팀 담당 주무관 1명

업무구분	담당자	담당자	국제외국인정책팀	국제정책팀
국제외국인정책팀장	063-280-2116	국제당해 및 외국인정책 총괄(기획, 조영, 법무, 지역협력팀 비서 등 비서 직책에대 대응 총괄)		
주무관	063-280-2082	외국인정책 총괄(기획 및 시행)의 수립, 지역특화사업(4차 산업)사업 운영(기획 수립 및 추진, 지역 특화사업 비서 관련 컨설팅(조직 관리 및 운영)의 추진,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의 발굴(기획, 기획, 인건, 예산)의 수립, 외국인주민 지원 운영(공무수당 추진(행안부, 법무부 등), 외국인정책 관련 시군 및 대학 등 유관기관 협의에 관한 운영, 외국인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등)		
주무관	063-280-2208	국제외국인통합계획수립, 국제진행팀 운영(지도, 통·번역, 교육) 등		
주무관	063-280-2207	· 비서 업무 지원, 외국인주민 지원 위원회 관리 - 외국인 정책 지원사업 추진(사업장지 방문정책 지원, 현장실무수 총괄) - 국제외국인 정책 관련 컨설팅(조직 관리) - 외국인주민 지원(국제외국인정책팀 운영) - 국제외국인 정책 관련 추진 - 해외외국인 정책(관리(비서), 홍보(재정) 등 지원 - 예산 관리 및 집행(재정) 지원, 일반 사무		
주무관	063-280-2817	○ 공무원생활장 인사위원회 운영 및 허가 관리 ○ 직원 교육(연차관리) 지원 ○ 귀국유급보조금 고시, 항공(여행)비 관리(신고, 통복, 활용, 기부) ○ 도 공무원 및 민간인 지원(유급) 예산 관리 및 집행(재정) 지원, 일반 사무		

군산시 조직 현황

인구대응담당관 → 외국인정책계 (계장 1, 주무관 2)

→ 외국인정책 관련 전담부서 총 3명(부서장)

외국인정책계장	· 외국인정책 업무 총괄 · 외국인정책 기획·조정	부서장
주무관	·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 숙원가능인력 지자체 추진체 추진 · 외국인근로자 관련 제도 개선, 발굴 · 외국인정책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인구대응담당관
주무관	· 외국인주민 관련 실태조사 ·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 현황 및 통계관리 · 외국인근로자 지원제도 시책발굴 및 추진	외국인정책계

02 추진 기반 현황 : 추진체계(조직)(2)

기타 13개 시군 조직 현황

군산시를 제외한 기초단체

- (전주시) 복지환경국/여성가족과/가족다문화팀 → 다문화가족 중심의 사업 추진
- (익산시) 바이오농정국/바이오농업과 → 외국인계절근로자
복지교육국/여성가족과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대상 정책
- (정읍시) 총무과(외국인 관리), 농업정책과 (외국인계절근로자)
- (남원시) 기획실/글로벌30TF(외국인유학생), 농정과(외국인계절근로자)
- (완주군) 농업축산과/농업정책팀(외국인계절근로자)

◇ 농업관련 담당부서 →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 정책

◇ 여성가족 및 복지 관련 담당부서 →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 '외국인정책'만을 담당하는 부서/팀/주무관 부재

→ 농업정책·다문화정책 등 관련 사업 이외 기타 사업들과 병행 추진, 외국인 대상별 중앙부처별 분리하여 각기 파편적 추진

∴ 김제시 외국인정책 전담 부서 신설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용역과제 추진 중

02 추진 기반 현황 : 인프라

전북도 거점 기능 역할의 인프라 현황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 국제화 진흥사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과 더불어 **외국인 정착지원사업** 추가 확대 함

- (외국인교류팀) [교육 지원] 전문기술/한국어 등 교육, 생활정보/ 온라인교육자료 제작 및 지역정착 플랫폼 구축 등으로 장기정착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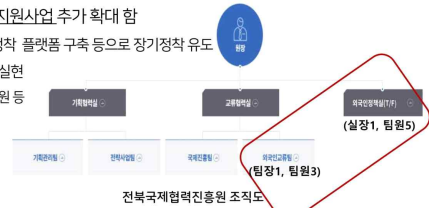
[활동 지원] 사회참여활동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도민-외국인간 사회통합 실현

ex) 세계인의날, 동호회지원사업, 전북글로벌 문화주간, 공공기관 유학생 직무인턴 지원 등

- (외국인정책실/TF) 외국인정책지원, 외국인관련 실태조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국제협력진흥원/외국인정책실 TF 위탁)

- 상담지원, 인식개선사업, 통·번역 지원, 한국어교육 운영, 멘토링 운영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조직도

기타 관련 인프라 현황

▪ **다문화이주민 플러스 센터 2개소** 운영 → 외국인 입국자 증가로 인한 이주민 지원의 중요성과 서비스 강화

- (전주시) 전주시가족센터 협업 운영

- (익산시) 익산출입국센터 +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외국인력팀 + 익산시가족센터 협업 운영

▪ **익산글로벌문화관** → 다문화사회 환경 조성 목적, 문화·역사 관련 전시물 관람, 의상·악기·놀이체험 등 공감대 도모

▪ **다문화가족지원 전북 거점센터** → 전북 1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갈 지원

▪ (사단법인) 아시아 이주여성센터 → 전북 정착 한 이주여성 지원에서 이주노동자, 재외동포,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민으로 대상 확대 지원

02 추진 기반 현황 : 업무협약

- ✔ (전북도-법무부)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 (23.10.31)

 - 외국인-이민정책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첫 협력 구축 사례
 - 정책실행 과정에서 외국인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전북도가 기능(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 계절근로제/지역특화형 비자 등 지역 특색 맞춤형 비자 제도 확대 적용 등
 - 주요 업무협약 내용
 - 외국인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 등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 발급과 체류지원
 -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 지원
 - 지역 정착·적응 및 사회통합 촉진 지원
 - -- 그 밖에 외국인정책 관련 7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

- ✔ (전북특자도-전북은행/우정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협업 업무협약 (24.

 - (목적) 전북자치도,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상 임금체불/무단이탈 및 브로커 문제 미연 방지
 - 전북특자도 + 전북은행 / 전북우정청 업무협약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급여 계좌 거래 내역 모니터링 → 급여 지급 여부와 브로커 의심 송금 내역 여부 확인 등 → 해당 시군에 사실 정보 통보 + 시군이 농가 직접 확인
 - 이외 협약내용
 - 환전 송금 시 우대환율 적용, 수수료 감면 혜택 지원
 - (우정청) 당행 계좌 개설 시 국제특급우편 소포 상자 무료 제공, 해외송금 수수료 감면 쿠폰 지급 등



02 추진 기반 현황 : 연구과제

- ✔ 2023년 연구과제 수행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 수행 연구 과제
 - (도) 전라북도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3 ~ 7월)
 - (경제통상진흥원) 전북자치도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기업담당자용/88개 업체, 외국인근로자용/227명 대상)
 - (외국인근로자) 사업 알게된 경로, 사업 신청 이유, 업무/급여/근무지/복지/가주지 만족도,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업체에 바라는 것, 가족초정여부 등
 - (기업체) 사업 알게된 경로, 채용경로, 개선행, 외국인력에 대한 만족, 의사소통/업무능력 만족도 등

- ✔ 2024년 연구과제 수행 현황

 - 전북연구원 수행 연구 과제
 - (정책) 전북특별자치도 계절근로자 관리 모델 연구
 - (정책)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비자(2유형) 확대 방안 연구
 - (현안) 전북특별자치도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의 효과적 활용 방안
 - 전북특별자치도 수행 연구과제
 - 전북 외국인 주민 실태 및 필요인력 수요조사 (~11월)
 -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12월)
 - 기초자치단체 수행 연구과제
 - (김제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운영(~10월)

02 '전북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비전과 추진전략별 세부과제(안)

지역민과 이민자의 공존·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전라북도					
비전	경제	채류 지원	지역통합	인권	협력/인프라
목표	글로벌 경제성장과 활력을 위한 체계적인 이민자 유입	지역사회 장기 정착을 위한 맞춤형 채류 지원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존중 및 소통에 기반한 지역통합	외국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권 강화	글로벌 지역행정 실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분야 목표					
추진 전략	① 특별자치도 성장동력에 필요한 이민자 우수 인재 유치 ② 이민자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③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 수요형 외국인력 정책 추진 ④ 미래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유학생 및 재외동포 유치	① 지역사회의 외국인수요를 고려한 채류 및 대응체계 확립 ② 지역 불법채류의 억제방안 마련	①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이해·교류 증진 ② 외국인의 정착화를 위한 생활지원 ③ 전북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외국인의 역량강화	① 외국인 인권 보호와 인권교육 체계 마련 ② 외국인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삶의 보장	① 지역기반 외국인 지원 체계 구축 ②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거버넌스 운영 ③ 지역데이터 구축 기반 외국인 지원서비스 추진
추진 과제	해외인재유치 전담센터 지정운영 해외인재 유치 박람회 개최 전북 해외학생 제도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거점) 설립 운영 재외동포 교육문화인수원 건립 FAO 세계농업대학 유치 제안 및 건립 국제농업개발기금(FAD) 국제기구 유치 전문인력 농업비자 운영 특례 부여 글로벌농생명식물특화 산학융합지구 조성 지역특화활비자 확대, 지역특화형 특례 운영 농어업·문화체험 분야 청소년외국인재인수제도 워킹홀리데이 연계 유학생 유치 부리산업/보건의료산업 양성 대학 확대 재외동포 동포(고려인·조선족) 마을 조성 재외동포/이민자 특화형지역활력타운 조성 재외동포 주민정착지원사업	외국인력 수요 산업 실태조사 전북 광역비자거점센터 운영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협의체 조성 채류 외국인 대상 시민교육 고용주 대상 불법고용 예방교육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류 관리	지역민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문화소통프로그램의 확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적응 특성화 사업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 무료 지원 외국인근로자 공공형 공유기숙사 설립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한국폴리텍대학 다문화교과 설치 운영	외국인 실태 조성 외국인 정착활경제선(행안부) 공무원 외국인인사개선 사업 동포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민 정기적 인권교육 외국인현장상담소 확대 운영 노동안전지원센터 운영 현장중심 인권거버넌스 운영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확대 신설 외국인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 외국인정책 추진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시군협력 유치 협의회 운영 이민자지원서비스 센터 지역 외국인 행정 통계 구축과 활용 외국인 관련 실태조사 제도 구축

03 이민정책 특례 현황 : 전북의 새로운 선택: 특별자치도

128년만의 변화,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작

■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

-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

- 2024년 1월 18일 중전의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의 새로운 법적 지위와 명칭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출범

5대 핵심산업, 3대 기반특례

■ 5대 핵심산업

-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 3대 기반특례

- 인프라: 5대 핵심산업 육성 14개 전복형

지구·특구·단지 지정

- 인력: 외국인 특별고용 등 우수인력 유입 및 양성

- 제도: 인·허가 특례 등 핵심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03 이민정책 특례 현황 :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63조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농생명지구, 2.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3. 문화산업진흥지구, 4. 산악관광진흥지구

②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 출입국관리법 유사 특례 사례

▪ 사증발급절차와 체류기간 상한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사증면제, 체류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03 이민정책 특례 현황 :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사례

☑ 인구감소지원특별법 관련 지역특화비자

▪ 지역특화형 비자 개념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우수인재 및 외국국적동포에게 체류 특례를 부여, 지역 정착 유도
- 지역우수인재(F-2)와 외국국적동포(F-4)에게 비자를 발급

▪ 지역특화형 비자 혜택

- 동반가족 초청, 취업허가/제한 완화, 지자체 정착지원, 영주자격 특례

☑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 고용추진을 통해 특정활동(E-7) 자격을 획득할 수 있고, 특히 첨단기술인턴에서 체류자격 변경 시, 학력 및 경력 요건 면제를 통해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에서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 가능

☑ 체류자격의활동허가 특례

- 제주영예교육도시종사자에 한해 기존의 체류자격의 활동 외에 국제학교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 식품접객업소 및 상업시설 판매종사원 허용

☑ 체류기간 상한 관련 특례

- 특정활동(E-7)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나, 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 연구원에 대해서는 5년의 상한을 부여함

04 전북 이민정책의 쟁점 사항

✔ 이민정책의 컨트롤 타워 부재

▪ 정책의 주요 결정권자 및 조정자 역할을 할 컨트롤타워 부재

- 컨트롤타워를 통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이라고 보다 단일사업 추진에 급급한 단기적 시각에서 사업만을 바라보고 추진

▪ 정책 업무의 분산으로 정책의 시너지효과 제한과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추진)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과 외국인 전반의 지원) 등

- 사업 내용이 추진기관의 성격과 사업이 맞지 않는데다 업무의 분산으로 인한 문제점 지적

(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근로자의 단순 애로가 아닌 일자리 매칭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구조로는 어려움

일자리 관련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우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할 수 있는 관리 체계의 필요성 절실

▪ 외국인정책 업무 담당하 인력 부족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

- (경진원) 지역특화형비자 담당업무 단 4명, 해마다 늘고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 행정업무 담당 직원 1명

- 외국인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 저하 → 외국인 근로자 / 이민자들의 지역 정착 어렵게 만드는 요인

- 정규직 배정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인력 배치 시 계약직의 단기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크게 저하 우려

→ 업무 연속성 부족은 정보 전달 및 업무 숙련도 저하로 이어지며, 결국 외국인정책 전반의 품질 저하시키는 결과 초래

→ 외국인정책이 단기적인 노동력 확보에만 초점 맞춘다면 지역발전의 지속 가능성 저하 초래

∴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장기 정착 및 지역 경제와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모색 필요

외국인 유입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 ↔ 외국인정책의 재정비, 기관간 협력과 전문성 강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설계 중요 등

강원자치도 이민정책 현황과 방향

2024. 06. 18.

양 철

강원연구원

Contents

- I. 강원도 이민정책 추진 배경
- II. 강원도 외국인 현황과 과제
- III. 강원도 이민정책 추진 방향

1. 강원도 이민정책 추진 배경

☑ [인구] 총인구 대비 3%, 초고령사회

- 2017년 이후 감소 추세, 향후 10년 지속 전망
- 고령화율 24%, 중장년층 유입 높지만 청년층 유출 심각
- 지역소멸위험지수 0.431(전국 4위), 소멸위험지역 12개

☑ [산업] 전체 GRDP 대비 2.5%, 2차 산업 취약

- 전국 대비 비중 2.4~2.5% 10년 간 지속
- 농·림·어업과 서비스업 비중 높은 산업구조
- 농·림·어업 : 4.6%(전국 1.6%), 서비스업 66.9%(전국 57.4%)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 5+1 첨단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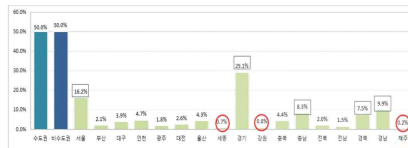
1. 강원도 이민정책 추진 배경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자료: 강원도·강원연구원(2024)

지역별 산업기술인력 현원 비중



지역별 미충원인력 및 미충원율 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3)

⇒ 인구고령화, 미래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

II. 강원도 외국인 현황과 과제

☑ 강원도 외국인 주민 4.1만 명, 강원도 전체 인구의 2.7%

- 2022년 기준 수도권에 59.4% 집중, **강원도는 1.8%**
- 원주, 춘천, 강릉에 50.6% 집중,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낮은 외국인 근로자 비율

지역별 외국인 주민 현황(전국/강원)

								단위: 명 / %									
	총인구	외국인	비율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등록	기타외국인		총인구	외국인	비율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등록	기타외국인
합계	51,692,272	2,258,248	4.4	403,139	189,397	175,756	397,581	586,473	강원도	1,528,037	40,989	2.7	6,069	5,058	3,800	2,443	10,243
서울	9,417,469	442,289	4.7	43,867	66,975	31,777	105,356	113,172	춘천시	293,124	7,687	2.6	502	2,004	853	384	1,999
부산	3,295,760	75,687	2.3	12,420	12,579	7,204	4,359	19,411	원주시	361,810	8,238	2.3	1,014	1,207	825	595	1,740
대구	2,366,852	53,684	2.3	7,444	7,555	5,411	3,812	14,627	강릉시	215,128	4,942	2.3	677	681	456	336	1,392
인천	2,989,125	146,885	4.9	19,814	6,360	12,664	29,114	42,249	동해시	86,772	1,698	2.0	361	12	212	107	392
광주	1,468,972	44,063	3.0	5,723	6,462	3,695	4,851	12,132	태백시	39,113	751	1.9	54	12	108	35	184
대전	1,473,662	36,435	2.5	2,631	9,399	3,388	2,076	8,779	속초시	80,903	2,211	2.7	538	131	203	193	522
울산	1,110,516	36,061	3.2	6,402	1,489	3,338	5,354	9,769	삼척시	64,289	1,651	2.4	330	106	144	35	346
세종	382,589	9,756	2.5	1,794	1,410	884	1,028	2,081	홍천군	65,215	2,226	3.4	517	*	184	156	489
경기	13,717,827	751,507	5.5	149,618	28,077	55,848	174,317	193,065	횡성군	44,954	2,034	4.5	389	71	163	149	541
강원	1,528,037	40,989	2.7	6,089	5,058	3,800	2,443	10,243	영월군	35,654	794	2.2	66	*	93	60	182
충북	1,624,993	79,411	4.9	18,428	4,568	5,570	12,789	20,262	평창군	38,699	1,249	3.2	169	15	131	126	356
충남	2,193,214	136,006	6.2	30,108	9,001	9,082	25,314	35,114	정선군	33,354	921	2.8	65	*	135	38	175
전북	1,774,248	65,119	3.7	10,705	9,502	5,722	2,680	16,119	철원군	41,145	1,547	3.8	508	*	106	46	418
전남	1,771,431	73,183	4.1	20,094	3,457	6,457	2,878	16,672	화천군	22,545	619	2.7	100	*	65	25	155
경북	2,620,373	104,564	4.0	22,962	11,275	7,757	7,869	28,285	회천군	20,824	833	4.0	96	*	89	27	346
경남	3,280,829	128,701	3.9	35,825	4,414	10,195	11,100	34,769	인제군	30,905	1,071	3.5	157	*	83	35	442
제주	676,375	33,908	5.0	9,415	1,816	2,954	2,241	9,724	고성군	27,127	2,003	7.4	364	811	61	42	439
									양양군	26,566	714	2.7	182	*	89	54	125

자료: 행정안전부(2023)

II. 강원도 외국인 현황과 과제

☑ 코로나 19 이후 외국인 증가율 회복세

- 2019년 9.9% ⇒ 2022년 9.2%
- 2022년 기준 광역자치단체 중 전년 대비 증가율 1위: 10.1% / 인제 30.3%(1위), 양구 24.3%(5위), 횡성 21.1%(6위)

코로나 19 전후 외국인 증가율 추이

	2019	2020	2021	2022
서울	4.2%	-4.8%	-4.1%	3.5%
부산	8.2%	-6.5%	-1.1%	4.4%
대구	11.3%	-4.2%	0.5%	4.7%
인천	11.2%	0.8%	2.5%	8.3%
광주	10.1%	-5.7%	1.1%	6.5%
대전	8.9%	-5.7%	2.3%	9.2%
울산	5.5%	-3.6%	-3.4%	3.5%
세종	16.6%	-4.6%	-0.5%	4.3%
경기	6.6%	-0.3%	-0.5%	4.9%
강원	9.9%	-5.0%	1.5%	9.2%
충북	8.3%	-2.5%	0.6%	7.4%
충남	7.8%	-2.9%	0.9%	8.5%
전북	10.0%	-1.4%	-1.0%	6.8%
전남	10.3%	-2.7%	-0.1%	8.6%
경북	9.3%	-6.1%	-0.4%	6.1%
경남	8.0%	-6.5%	-2.7%	4.4%
제주	10.0%	-2.0%	-3.5%	3.7%

자료: 행정안전부(2023)

전년 대비 외국인 증가율

	2021	2022	증가율
서울	426,743	442,289	3.6%
부산	72,361	75,687	4.6%
대구	51,140	53,684	5.0%
인천	134,714	146,885	9.0%
광주	41,181	44,063	7.0%
대전	33,078	36,435	10.1%
울산	34,800	36,061	3.6%
세종	9,335	9,756	4.5%
경기	714,497	751,507	5.2%
강원	37,230	40,989	10.1%
충북	73,629	79,411	8.0%
충남	124,492	136,006	9.2%
전북	60,684	65,119	7.3%
전남	66,871	73,183	9.4%
경북	98,197	104,564	6.5%
경남	123,074	128,701	4.6%
제주	32,643	33,908	3.9%

II. 강원도 외국인 현황과 과제

☑ 높은 단기체류 비중, 낮은 자녀 출산율

- 5년 미만 : 전체 58.2%, 강원도 68.4% / 1년 미만 : 전체 16.7%, 강원도 25.3%
- 외국인 자녀의 거주 비중과 국내 출생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낮음 ⇒ 지역 유입 후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

지역별 체류기간 현황_한국국적 가지지 않은 자

지역	5년 미만		5년 이상		1년 미만		10년 이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계	1,752,346	58.2%	732,325	41.8%	291,962	16.7%	286,689	16.3%
서울	360,947	20.25%	160,618	44.5%	59,158	16.4%	70,811	19.6%
부산	55,973	36.61%	19,354	34.6%	11,604	20.7%	7,547	13.5%
대구	38,849	24.91%	13,934	35.9%	6,833	17.6%	5,763	13.5%
인천	110,201	58.43%	51,703	46.9%	15,439	14.0%	21,356	19.4%
광주	32,863	22.08%	10,772	32.8%	6,611	20.1%	3,418	10.4%
대전	26,283	18.42%	7,853	29.9%	6,909	26.3%	3,034	11.5%
울산	26,352	14.62%	11,879	45.1%	3,884	14.7%	5,044	19.1%
세종	7,197	4.97%	2,326	32.3%	1,444	20.1%	915	12.7%
경기	600,025	32.49%	275,733	45.9%	82,952	13.8%	108,698	18.1%
강원	22,633	18.91%	8,722	31.6%	6,983	25.3%	3,173	11.6%
충북	61,617	38.57%	23,032	37.4%	11,393	18.5%	7,434	12.1%
충남	108,619	66.79%	41,807	38.5%	19,856	18.3%	13,551	12.5%
전북	44,728	30.85%	13,867	31.0%	10,190	22.8%	4,647	10.4%
전남	49,558	32.98%	16,589	33.5%	11,286	22.8%	5,537	11.2%
경북	78,148	50.31%	27,826	35.6%	14,623	18.7%	8,777	11.2%
경남	96,303	58.63%	37,660	39.1%	17,806	18.5%	13,192	13.7%
제주	26,150	17.49%	8,650	33.1%	4,991	19.1%	2,612	10.0%

자료: 행정안전부(2023)

외국인 자녀 및 국내 출생 현황

지역	합계		국내출생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계	299,440	100.0%	17,363	100%
서울	36,067	13.0%	35,550	12.6%
부산	13,124	4.4%	12,653	4.5%
대구	9,970	3.3%	9,586	3.4%
인천	19,571	6.5%	17,796	6.3%
광주	7,482	2.5%	7,250	2.6%
대전	6,798	2.3%	6,561	2.1%
울산	6,299	2.1%	6,040	2.1%
세종	1,752	0.6%	1,677	0.6%
경기	82,095	27.4%	75,294	26.7%
강원	8,895	2.9%	8,579	3.0%
충북	11,407	3.8%	10,974	3.9%
충남	17,456	5.8%	16,669	5.9%
전북	13,993	4.7%	13,614	4.8%
전남	16,713	5.6%	16,323	5.8%
경북	17,917	6.0%	17,420	6.2%
경남	21,588	7.2%	20,944	7.4%
제주	5,383	1.8%	5,147	1.8%

II. 강원도 외국인 현황과 과제

☑ 외국인 유학생 이탈과 산업 인력 부족

-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12.3%로 중위권에 해당 ⇒ 유입보다 취업기반 및 정주조건 개선
-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14.9%로 광역도 중에서는 최하위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에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 높은 특정국가(베트남, 태국 등) 비중 ⇒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전략과 연계, 기존 지역에 집중 Vs. 신규 협력대상 확대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현황

지역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계	189,397	100.0%	403,139	100.0%
서울	66,975	35.4%	43,667	10.8%
부산	12,579	6.6%	12,420	3.1%
대구	7,555	4.0%	7,444	1.9%
인천	8,360	4.4%	19,914	5.0%
광주	6,462	3.4%	5,723	1.4%
대전	9,399	5.0%	2,631	0.7%
울산	1,489	0.8%	6,402	1.6%
세종	1,410	0.7%	1,784	0.4%
경기	28,077	14.8%	149,618	37.1%
강원	5,088	2.7%	6,089	1.5%
충북	4,598	2.4%	18,428	4.6%
충남	9,001	4.8%	30,108	7.5%
전북	9,502	5.0%	10,705	2.7%
전남	3,457	1.8%	20,094	5.0%
경북	11,275	5.9%	22,892	5.7%
경남	4,414	2.3%	36,825	9.1%
제주	1,816	1.0%	9,415	2.3%

자료: 행정안전부(2023)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현황

지역	중국 (한국계)		베트남	중국	태국	우즈베크	미국	캄보디아
	인원	비율						
계	527,325	100.0%	209,373	204,150	163,311	68,848	58,203	44,536
수도권	439,403	83.3%	74,949	136,102	71,426	31,742	42,796	17,990
비수도권	87,922	16.7%	134,424	68,048	91,885	37,106	15,407	26,546
강원	2,458	0.5%	5,712	2,561	4,398	1,098	1,112	913

II. 강원도 외국인 현황과 과제

☑ 이민정책 관련 조직

- [주무부처] 기획조정실 - 균형발전과 - 외국인정책TF : 팀장 1인, 주무관 3인
 - 이민정책 종합계획 수립, 외국인 유입정책 제도 개선 및 사업 발굴, 비자전환, 외국인 정착지원 자원, 사회통합 등
 ※ 조직 개편 예정: 균형발전과를 '지역소멸대응정책관'으로 확대, 외국인정책 전담팀 신설
- [특례] 특별자치추진단 - 규제혁신과 - 기업규제팀 : 주무관 1인

☑ 이민정책 관련 연구

- [강원연구원] 특례 발굴 지원 중심 / 분권적 관점에서의 강원도 외국인 정책 방향(2024) 진행 중
-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유입을 위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2023)

☑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III. 강원도 이민정책 추진 방향

☑ 강원도가 직면한 과제

- 유입은 증가 추세, 그러나 수요인력 부족, 높은 단기 체류 비중과 외국인 유학생 유출
 ⇒ 지역 유입 후 정착을 위한 일자리, 정주여건(교육, 의료 등) 등 기반 조성 및 확대 필요
-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 권한 및 의견 전달 통로 제약
 - 외국인이 우리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 소통하고 지역 외국인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정부
 - 중앙-지방 간 협의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구조 ⇒ 19개 위원부처와의 개별적 협의 난항

☑ [Two-track] 기본계획 수립 +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 ※ 기본 프로세스 : 지역과 산업에 필요한 수요 진단 → 기본계획 수립 → 계획 추진에 필요한 특례 발굴
- 이민정책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이민정책 특례 발굴

III. 강원도 이민정책 추진 방향

☑ 특별자치도로서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 확대

- 중앙정부-강원도는 미주-유럽의 중앙-지방 관계와 유사한 분권적 관계 구축
 - 이민정책은 부처 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체계 구축이 필수
- 중앙부처는 이민과 사회통합 정책 방향성 수립, 강원도는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실행
 -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실험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시대"의 진정한 중앙-지방 관계 정립에 기여
 - 「강원특별법」을 통해 체류자격 등 차별화된 이민정책을 구현함으로써 중앙-지방 간 상생 및 상호호혜적 모델 창출

☑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에 부합한 역할 정립

-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중점산업과 연계 : 5+1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 미래산업 관련 고숙련-전문직 이민자 유입 및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 확대
 -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 RISE/글로벌대학 사업과 연계

III. 강원도 이민정책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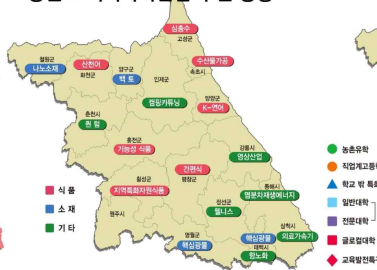
☑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중점산업+교육부 사업과 연계

-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강원도 사군별 산업구조 및 업종별 외국인수요를 연계한 정책 수립
 - 숙박(호텔), 요식업 등 서비스업종의 비전문 외국인력 취업비자 허용에 따른 관광서비스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특화 방안 마련
- [RISE사업/글로벌대학] 교육부 중점사업과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확보 및 일자리 매칭을 통한 지역 정착 방안 마련

강원도 5+1 첨단산업 추진 방향



강원도 지역특화산업 추진 방향



강원도 주요 교육기관 현황



Ⅲ. 강원도 이민정책 추진 방향_강원특별법 3차 개정

☑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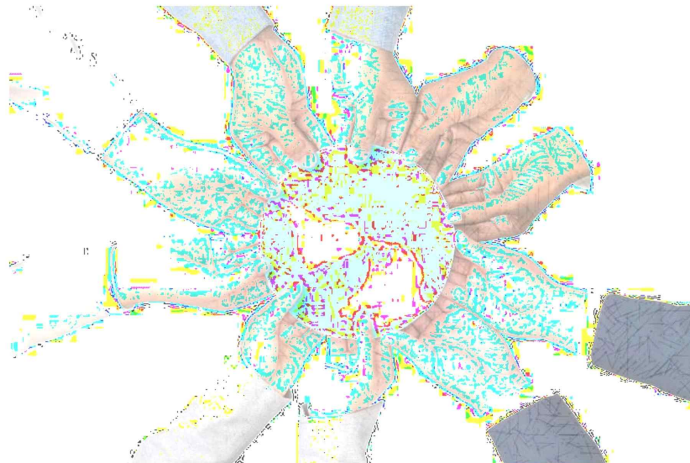
- 강원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는 특구, 단지 및 지구에 소재하는 기업·연구기관 종사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전북특별법과 동일하게 지정된 날로부터 3년간 특례 적용
 - ※ 연구개발특구,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산림이용진흥지구, 농촌활력촉진지구, 자유무역지역

☑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 특례

- [강원] 법무부장관은 (글로벌대학)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인재가 도시사의 추천을 받으면 그 영주자격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적용
- [법무부] 강원도가 글로벌 대학 중 일부 전공 등을 과학기술원에 준하는 요건을 설정하여 법무부에 우수인재를 추천하면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수준에서 수용 가능

☑ 광역체류자격 신설 특례 : 폐지

Q&A



토 론 문

이혜진(경남연구원)

‘지역이민정책’ 형성과정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들보다 이른 시기부터 지속성을 가지고 ‘외국인정책’을 펼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전북자치도나 강원자치도의 경우는 지역소멸대응을 위한 방책의 하나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나, 전북이나 강원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도적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이 되어 ‘지역이민정책’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각 지역의 연구기관에서는 해당 지역의 외국인주민의 생활실태나, 지역주민의 다문화수용성 정도 그리고 지역 산업의 노동력의 수요·공급 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이를 근거로 그 지역에서 요청되는 외국인(이민)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우수인재 유치

‘지역특화비자’로 유치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대상은 우수인재이거나 외국국적동포이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전북)나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서울, 강원)에게는 비자 특례를 주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이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우수인재로 유치하고 싶은 대상이다.

강원이나 전북의 이민정책을 살펴보면, 각 지역이 지향하는 미래상에 걸 맞는 우수인재를 유치하고자 한다. 전북의 경우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강원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례조치 중 ‘지역특화비자’가 활용된다. 다만, 아직은 각각의 구상이 영글고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행착오와 숙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인구감소를 경험하는 세계의 많은 국가는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도 수 십년 전부터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펼쳐 왔다. 따라서 우수인재에게는 국경선이 높지 않다. 우수인재들이 선택할 만한 지역(여건)만들기가 우선되어야 우수인재의 유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우수인재에 대한 글로벌 쟁탈전을 비롯하여 지자체간 쟁탈전이 벌어진다면 백해무익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우수인재풀을 구축하여 적합한 지역과 기업체 혹은 학교 등을 추천하는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그리고 우수인재의 범위를 이공계 전공자나 첨단 과학기술분야로만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사회계열 등으로도 전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이민정책은 보다 확장적 사고를 갖고 우수인재 유입에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미 생활하고 있는 이주자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미 생활하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이민정책보다 훨씬 인간미 넘치는 지방정부의 이민정책 추진이야말로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주민의 삶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 이미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미등록' 이주자가 이미 한국사회에 40만 명 이상 살고 있다. 지금은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앰네스티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다.

〈각론〉

1. '서울시 외국인정책 변천과정과 특징'에 대해

- 추진체계에는 서울시 및 시 출연기관, 산하기관만 포함되어 있음
- 거버넌스 부분에는 '민관학 거버넌스'로 서울시교육청 및 대학은 포함되어 있으나, 이주민 지원 민간단체나 변호사단체 등과의 협업은 보이지 않음(민간기관 및 서울시청 이외의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서울시 외국인정책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글로벌 도시 정책관' 신설(1관 4담당관)은 선진사례가 될 것임
- 서울 자체가 사람과 인프라가 집중하는 곳이므로, 외국인들도 서울로 향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큼(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모이듯이 외국인(청년)들도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임)

2. '전북 이민정책 추진기반 구축 현황 및 특례조항'

- JB 외국인유학생 유치 지원 협의체 구성('22.8) -> 국제외국인정책팀 담당부서 신설('23.3)
-> 전북국제협력진흥원('23.6) -> 전북지역 외국인 인력 관리 협의회('23.11) -> 법무부-전라북도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 체결('23.10)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외국인 국제정책과 확대 신설('24.7)로 이민정책 추진기반이 공고해지고 있음
- 1년 4개월 만에, '팀 -> 과', '국제외국인정책 -> 외국인국제정책'로 변화한 것은 국제교류와 정주외국인이나의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생각됨(전북국제협력진흥원 : 국제화 진흥사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에 외국인 정착지원사업 추가 확대)
- 법무부-전라북도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 체결('23.10)로 어떤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작한 이래로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규모 및 고용분야(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는 얼마 정도 유치되었나?)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다문화가족 지원과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양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궁금함.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제10조(의견수렴)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창구는 구체적인 내용, 방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잘 활용할 필요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및 유치에 방점이 찍혀 있음. 유학생의 경우,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이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음. 조례 상에서 밝히고 있는 생활·법률·국내 취업 등에 관한 상담은 어디서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함. 유학생에 집중한다면, 일본 오이타현의 '오이타 유학생비즈니스 센터' 운영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음

3. '강원자치도 이민정책 현황과 방향'

- “강원도예의 이주민 유입은 증가 추세나, 수요인력 부족으로 단기 체류 비중이 높고, 외국인 유학생 유출이 많음” - > 지역 유입 후 정착을 위한 일자리, 정주여건(교육, 의료 등) 등

기반 조성 및 확대 필요 => 이는 지역소멸대응사업으로 목적과 내용과 일치함. 지역소멸을 이민정책으로 막아보려고 하지만, 삶의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어야만 외국인 유치도 가능함

- 외국인의 어떤 지역으로의 이주 요건은 일자리, 에스닉 네트워크, 생활인프라 집적 등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가능함

토 론 문

고보혜(광주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 대부분의 국가는 외국인과 이주자의 입출국, 체류, 출국, 영주,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외국인 또는 이주자라는 동질적 집단을 대상으로 절차적 내용(입출국, 체류)과 실체적 내용(활동과 처우 등)에 대한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는 1990년대부터 외국인과 이주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외국인과 이주자는 한국사회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함. 그러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외국인정책’과 달리 법무부는 국적법을 고려하여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여성가족부 등 다수의 중앙부처에서는 관례적으로 ‘다문화 정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입법과정에서 인권보호, 갈등조정 등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고, 법제의 장기적인 효과 등에 대한 검토 부족,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됨
- 외국인 및 이주자 관련 주요 법제

	법령명	제정일	소관부처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1999.9.2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2003.8.16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3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7.5.17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법)	2008.3.2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5	난민법	2012.2.10	법무부 난민과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	2007.12.14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7	재외동포기본법	2023.5.9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8	출입국관리법	1963.3.5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9	국적법	1948.12.20	법무부 국적과

- 광주광역시의 이민정책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포함함. ▶다문화 사회 통합 지원: 이민자와 그 가족이 지역 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한국어 교육, 문화 이해 프로그램, 지역 사회 행사 등을 통해 이민자와 지역 주민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촉진 ▶경제적 자립 지원: 이민자들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 안전망 강화: 이민자들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주택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다문화 교육 확대: 지역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며 교사들에게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를 제공 ▶지역 사회 참여 확대: 이민자들이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 지역 자원봉사 프로그램, 주민 자치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정책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중앙정부, 비영리단체, 민간 기업 등과 협력하여 이민자 지원 정책 추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광주광역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2020년 9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 이밖에도 이주노동자의 인권,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문화다양성 증진과 관련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주민의 지원을 위한 조례 등을 구축하고 있음

- 외국인 및 이주자 관련 광주광역시 주요 자치법규

	자치법규명	제정일	소관부서
1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폐지)	2020.9.28	여성가족국 외국인주민과
2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24.5.31	여성가족국 외국인주민과
3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폐지)	2020.9.28.	여성가족국 외국인주민과
4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2016.11.15	여성가족국 외국인주민과
5	광주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운영 조례	1999.4.15	인공지능산업실
6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2013.10.1	여성가족국 외국인주민과
7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1.1	문화정책관
8	광주광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08.1.1	국제교류담당관
9	광주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2017.8.1	국제교류담당관

○ 광주 고려인마을 사례 및 시사점

-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광산구 월곡동)은 구소련에서 이주한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현재 약 7000여명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음. 고려인들은 일제 강점기와 그 이후 소련의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한국인들의 후손으로, 이들은 1990년대 이후 한국으로 재이주하면서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정착함
- 광주광역시는 ▶주거 지원 ▶일자리 지원 ▶교육 및 언어 지원 ▶문화 교육 ▶사회적 통합 프로그램 ▶문화 교류 행사 ▶다문화 가정 지원 ▶건강 검진 및 의료 지원 ▶사회 복지 서비스 ▶자원봉사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주민 자치 활동 지원 ▶“디아스포라 역사마을” 조성 등을 통해 고려인들이 지역 사회에 잘 통합되고,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은 고려인 3세 또는 4세로, 최근 고려인마을의 높은 출생률로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본인과 자녀(아동)의 국적취득의 벽이 높고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 노동시장에서 낮은 경쟁력 등으로 소득수준이 낮아 기초수급자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

○ 한국사회는 심각한 수준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위기, 지방소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외국인 수용 또는 이민정책을 논하고 있지만, 발표자들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정책의 컨트롤타워 및 추진체계 부재,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이 지방정부가 처한 현실임. 특히 다양성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사회통합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데, 사회통합을 가져오는 것은 다양성의 양적 증가가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 태도의 질적 증가일 것임.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의 인권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민정책은 성공할 수 없을 것임. 대표적으로 출입국관리법에서의 사실상 피의자에 준하는 용의자라는 표현, 보호는 사실상 구금에 해당한다는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배제 등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기본권 주체성 부정, 사업장 변경제한 조치, 매우 인색한 난민인정률 등은 우리사회의 외국인을 대하는 민낯이라 할 수 있음. 단순히 인구위기,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이주자를 받아들인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주체로서 인정하고 더 나아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우리사회에 통합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임. 국내 지역사회의 실태와 체류 외국인의 인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보장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장애 요인들을 적극 고려하여 이민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토 론 문

김대성(전남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김현민(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과 전북, 강원 등 특별시와 특별자치도 등 ‘특별한’ 지역의 외국인, 이민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해안을 얻고 싶다.

1. 질문1(서울특별시)

서울시의 제3차 외국인정책은 제2차 외국인정책과 그 지향점에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제2차 외국인정책 마스터플랜이 민주시민 역량강화, 보편적 인권과 안전 확보, 시민의 의무와 권리 공유 등 주로 외국인 주민의 시민권(citizenship)에 기반했다면, 제3차 외국인정책 마스터플랜은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등 우수인재 유치, 외국인력 확충 등 인재(talent)와 인력(Human Resources)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한 전환의 배경에 다양성, 인재유치 경쟁, 낮은 포용성 등 여건이 자리하고 있다. 제3차 마스터플랜에 담긴 주요 전략과 사업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서울시의 외국인정책 비전과 전략 등 미래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청사진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 구성중에 있는가?

2. 질문2(전북특별자치도)

전북은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법적 지위를 변화시켰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기반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이민정책에서도 이에 적실한 규제완화와 특례를 요구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제도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각종 지원 조례, 추진체계의 변화, 중간조직 등 인프라 구축, 협업체

계 구축, 정책연구는 타 지자체와 경로가 유사하다. 특별자치도로서 전북은 3대 기반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특별법상의 조문일 뿐 법무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실현시켜나갈 것인가? 전북특자도가 지향하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에서 ‘글로벌’의 의미는 무엇인가?

3. 질문3(강원특별자치도)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전북과 마찬가지로 제3차 특별법 개정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특례, 외국인유학생 우수인재 특례, 광역체류자격 신설 특례 등 전북특별자치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 지역의 현실적 차원에서 체류자격에 대한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특히 강원특자도 특별법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나 지역의 외국인, 이민정책에 대한 숙론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미래상이 정립없이 사업 수준의 특례에 치중한다면 지역정책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에 따른 한계, 즉 실천력 없는 특별법 개정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는지 묻고 싶다. 아울러 전북특자도와 마찬가지로 강원특자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서 ‘글로벌’은 무엇을 뜻하는가?

4. 소결

대도시, 도농복합지역은 외국인, 이민정책에서도 접근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의 외국인 정책방향과 목적, 전략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적, 지역적으로 각각 차별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외국인정책, 이민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사업 중심이 아닌 비전 중심으로 단계적 정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이라는 또 하나의 정책타깃을 놓고, ‘유입’과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은지 반문해 본다. 끝으로 도농복합지역이 요구하는 외국인, 이민정책 특례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정책연대(policy solidarity)를 통해 요지부동인 중앙집권적 외국인, 이민정책 권한을 지역으로 분권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또한 지역이민정책네트워크의 주요 역할과 기능이 아닐까 싶다.

제2세션

지역이민정책의 도전과제

좌 장: **임동진** 교수 | 순천향대학교

발표1: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민정책 과제

박민정 연구위원 | 이민정책연구원

발표2: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 분포와 정책 방향

김영혜 정책연구실장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발표3: 인천의 인구·재외동포 정책 동향 및 관련 구상

김수한 연구위원 | 인천연구원

토론1: **양원탁** 부연구위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2: **이정우** 상임연구위원 |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토론3: **김혜정** 복지가족정책연구팀장 | 울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세계인의 날 기념 포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민정책 과제

2024. 6.



Contents

- I 이민정책 동향
- II 지역 이민정책 현황: 비수도권
- III 지역 이민정책 현황: 수도권



참고자료

1. 박민정 외. 외국인 핵심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국가균형위원회. 2023.
2. 박민정 외. 서울시 외국인주민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시청. 2022.
3. 박민정 외.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경상북도청. 2023.
4. 박민정, 김도원. 서울시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를 통해 본 정책현안: 장기체류외국인 생활인구 분석. 이민정책연구원. 2022.



이민정책 동향



I 이민정책 동향

정주형 이민자 증가에 따른 지역정부 역할 강화

(표) 연도별 취업 체류자격과 정주형 체류자격 외국인 규모(12.31. 기준)

구분		2011	2015	2019	2021	2023
취업 체류자격	전문인력(E1-E7)	47,774	48,607	46,581	45,143	68,643
	비숙련인력(E8-E10, H2)	547,324	576,522	520,680	361,526	399,938
	소계	595,098	625,129	567,261	406,669	468,581
정주형 체류자격	거주(F2)	138,418	38,881	43,403	42,367	53,056
	재외동포(F4)	136,702	328,187	459,996	478,442	533,295
	영주(F5)	64,979	123,255	153,038	168,118	185,213
	결혼이민(F6)	-	128,879	129,200	134,285	140,161
	소계	340,099	619,202	785,637	823,212	911,725

- ❖ 정주형 이민자 증가에 따른 노동인력 정책에서 통합정책으로 이민정책 관점의 변화 → 지역정부 역할 강화
 - 2015년 이후 취업자격 체류자격보다 정주형 체류자격의 규모가 커졌으며, 2023년 정주형 이민인구가 취업이민인구의 약 2배
 -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지역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었음

I 이민정책 동향

장소기반(Place-based) 정책으로의 지역이민정책 추진

- ▶ **OECD Regional Outlook(지역전망) : 지역개발정책위원회**
 - 국가내 지역간 생산성 불균형의 문제에 대응할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 촉구
 - OECD 국가의 1/3은 국가 전체 생산성 증가가 단일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한국)
 - 지역의 특징점을 살린 장소기반 경제정책 개발 요구
- ▶ **장소기반 정책과 이민정책의 연계성**
 - 이민자는 지역 평균보다 젊은 경향이 있어 고령화를 완화시킴
 - 지역의 정책적 수요에 따라 공급(규모) 조절이 가능함
 - 지역의 신규 투자자가 될 수 있음
 - 네덜란드, 스웨덴의 적극적 이민자 유치 사례
- ▶ **미래 수요에 맞춘 다층적·혁신적 거버넌스 구축**
 - 도시화, 고령화, 이주를 포함한 인구변화에 민감할 것

* 출처: OEC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2019. OECD Regional Outlook 2019 : LEVERAGING MEGATRENDS FOR CITIES AND RURAL AREAS.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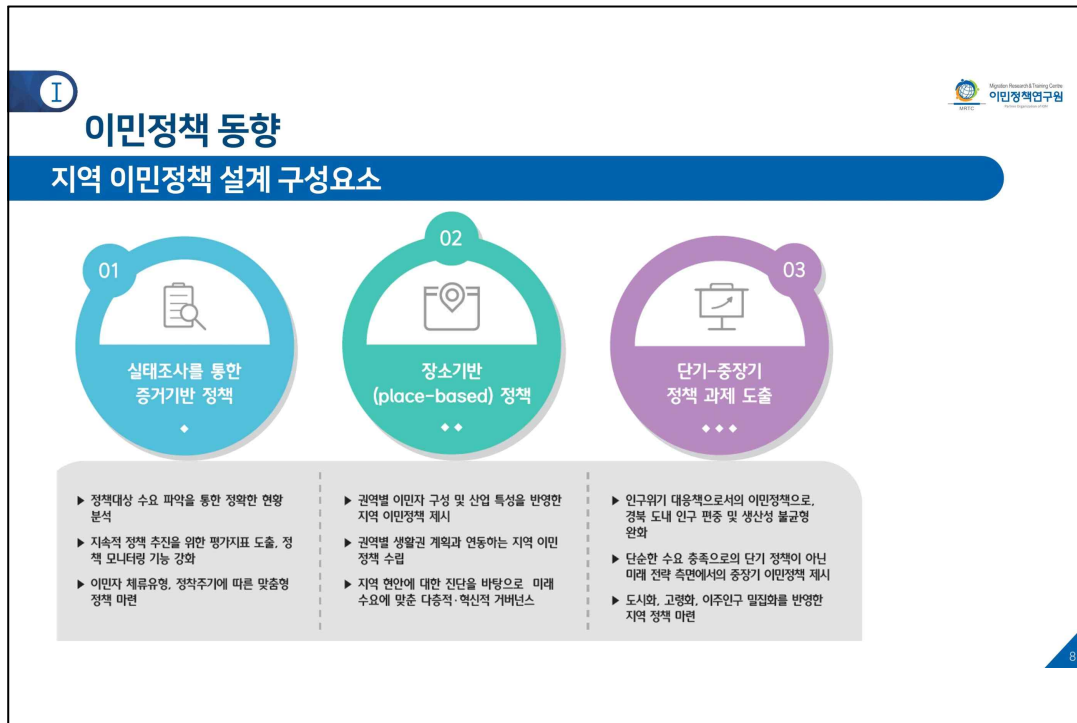
이민정책 동향

장소기반(Place-based) 정책으로의 지역이민정책 추진

Im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er
이민정책연구원
www.imrc.or.kr

지역	전체	비전문 취업	방문 취업	전문 인력	유학생	거주	재외 동포	영주	결혼 이민자	기타
		F9	H2	E1~E7	D2	F2	F4	F5	F6	
총계	1,881,921	298,504	101,434	68,643	151,483	53,056	533,295	185,213	140,161	350,132
	100.0	15.9	5.4	3.6	8.0	2.8	28.3	9.8	7.4	18.6
서울	397,153	2,928	28,740	14,303	56,537	13,605	144,388	48,257	21,656	66,739
	100.0	0.7	7.2	3.6	14.2	3.4	36.4	12.2	5.5	16.8
인천	121,948	13,328	6,253	2,897	4,603	5,109	40,932	17,077	10,150	21,599
	100.0	10.9	5.1	2.4	3.8	4.2	33.6	14.0	8.3	17.7
경기	655,062	111,092	47,380	15,938	23,335	19,032	229,433	78,052	42,882	87,918
	100.0	17.0	7.2	2.4	3.6	2.9	35.0	11.9	6.5	13.4
대전	26,643	1,125	481	1,487	8,123	377	3,259	1,523	2,868	7,400
	100.0	4.2	1.8	5.6	30.5	1.4	12.2	5.7	10.8	27.8
충남	117,778	27,021	6,169	2,828	7,219	2,369	32,563	8,211	7,565	23,833
	100.0	22.9	5.2	2.4	6.1	2.0	27.6	7.0	6.4	20.2
경북	77,306	20,333	1,879	2,583	7,934	1,358	10,281	3,068	6,918	22,952
	100.0	26.3	2.4	3.3	10.3	1.8	13.3	4.0	8.9	29.7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12. 등록외국인통계 / 거소신고 통계.





II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지역 이민정책 현황: 비수도권

1. 지역 인력 유형화 및 인력 수급 방안 마련

- ▶ **우수인재**
 - 전문인력(E-1~E-7-1), 취재(D-5)~무역경영(D-9) 해당 체류자격 취업 확정 인재
(호텔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E-7-2~E-7-4) 제외)
 -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
- ▶ **지역인재**
 - 잠재인재 : 유학(D-2)
 - 필수인력 :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E-7-2~E-7-4)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 ▶ **정주형 인재**
 - 동포 :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 중국동포와 CIS국가 동포
 - 결혼이민자 활용 방안(여성인력 활용)
 - 거주(F-2) 및 영주(F-5) 유치 및 정착

II

지역 이민정책 현황: 비수도권



1. 지역 인력 유형화 및 인력 수급 방안 마련

- 현행 지역특화 비자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별도 이민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지방대학-사업체 협력 모델 구축
- 단기적 정책 ; 지역별 산업수요 파악을 바탕으로 지방대학 연계
 - 코로나19로 인한 즉각적인 인력수급 수요 대응 이민자 유입
 - 제조업, 뿌리산업, 6차산업 등 현행 지역 수요 반영
 - 문제점 : '지역특화', 즉 인구감소지역 간 차별성이 높지 않음
- 중장기 정책 : 지역인재 확보 및 지역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과 연동한 "지역"인력 수급 방안 모색
 - 인력 유형에 따른 수급 방안 마련
: 정주형 우수인재 / 정주형 지역인재 / 단기순환형 인력 / 계절성 인력 구분한 산업별 전략 수립
 - 정주형 인재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산업군으로 재편성하여야 함

II

지역 이민정책 현황: 비수도권



1. 지역 인력 유형화 및 인력 수급 방안 마련

- ✓ 분석방법 :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 ✓ 분석에 활용한 변수 : 인구 / 산업 / 외국인

구분	분석에 활용한 변수
인구	인구수, 가구수, 고령화율, 인구밀도, 인구순이동, 인구증가율, 고령화인구비율
산업	1차산업 종사자수(남, 녀), 제조업 종사자수, 도소매업 종사자수, 숙박업및음식점업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운수업및창고업 종사자수, 건설업종사자수
외국인	등록외국인수(남, 여), 외국인근로자수, 결혼이민자수, 유학생수, 동포수, 기타외국인수

* 활용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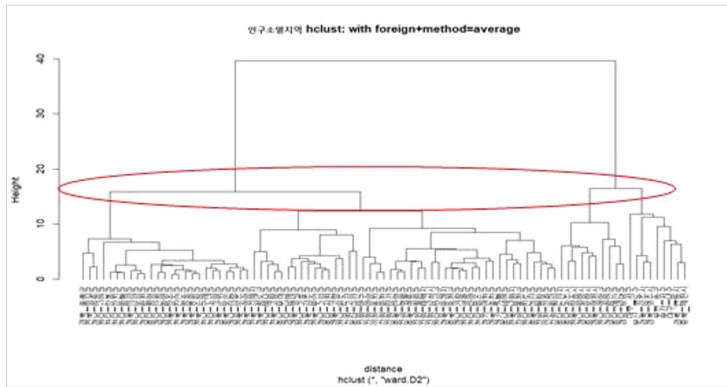
- 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및 인구총조사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산업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외국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록외국인 현황.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II

지역 이민정책 현황: 비수도권

1. 지역 인력 유형화 및 인력 수급 방안 마련

- 1단계 :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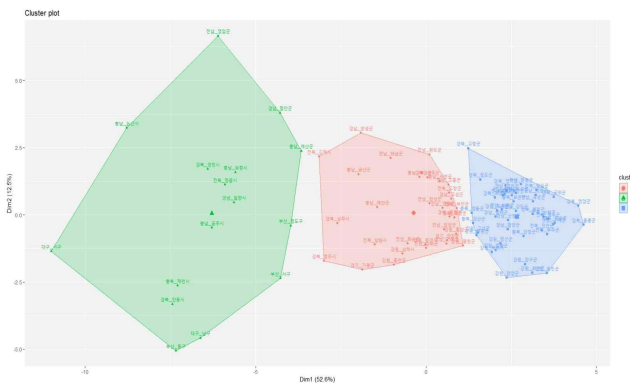


II

지역 이민정책 현황: 비수도권

1. 지역 인력 유형화 및 인력 수급 방안 마련

- 2단계 :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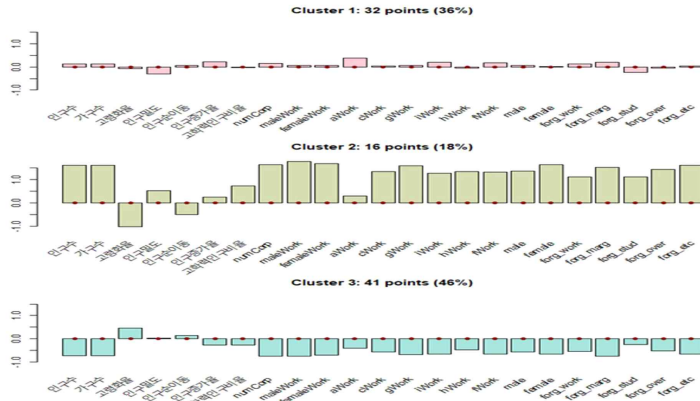
II

지역 이민정책 현황: 비수도권



1. 지역 인력 유형화 및 인력 수급 방안 마련

2단계 :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 변수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II

지역 이민정책 현황: 비수도권



1. 지역 인력 유형화 및 인력 수급 방안 마련

3단계 : 지역 유형화에 따른 산업 및 외국인력 매칭 방안 도출

유형	지역 명
유형 I 지방 수도시형 (16)	부산 동구,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경북 안동시, 영천시 경남 밀양시, 함안군 전북 정읍시 전남 영암군
유형 II 정체형 (32)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삼척시, 횡성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태안군 경북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영주시, 울진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창녕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전남 고흥군, 담양군,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해남군, 화순군
유형 III 인구 소멸형 (42)	인천 용진군 강원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화천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충남 정양군 경북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함천군 전북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 인구수 상대적으로 많은 편
(대체로 인구감소 제외지역 인근에 위치)
- 제조업 + 서비스업(창업) 가능
- 유학생, 중국동포, 숙련/준숙련

- 제조업 중심
- 비숙련노동자의 정주화 노력 필요
- 중장기 지역 중점 산업과의 연계

- 상대적으로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높은 편
- 관광업, 농업의 스마트팜 등 고려
- 거점도시와의 연계 산업 개발
- CIS 국가 동포 유치 고려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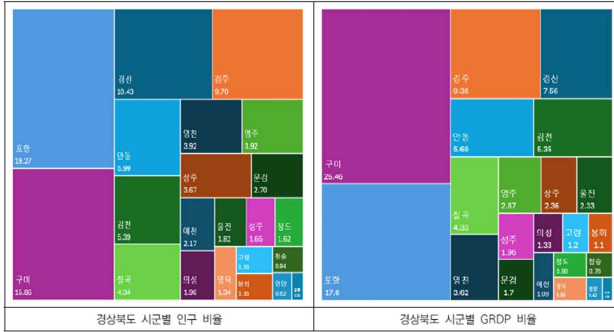
지역 이민정책 현황: 비수도권

2. 광역 내 균형발전 _ 생산성 분포 고려



(그림 1-2) 경상북도 인구 및 경제(GRDP) 편중 정도(트리맵)

(단위: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2023. 10. 기준 / 경상북도 지역내 총생산(시군구 GRDP), 2020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3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65_03E&conn_path=I3 (GRDP)

17

II

지역 이민정책 현황: 비수도권

3. 유학생 지역 정주화 및 취업연계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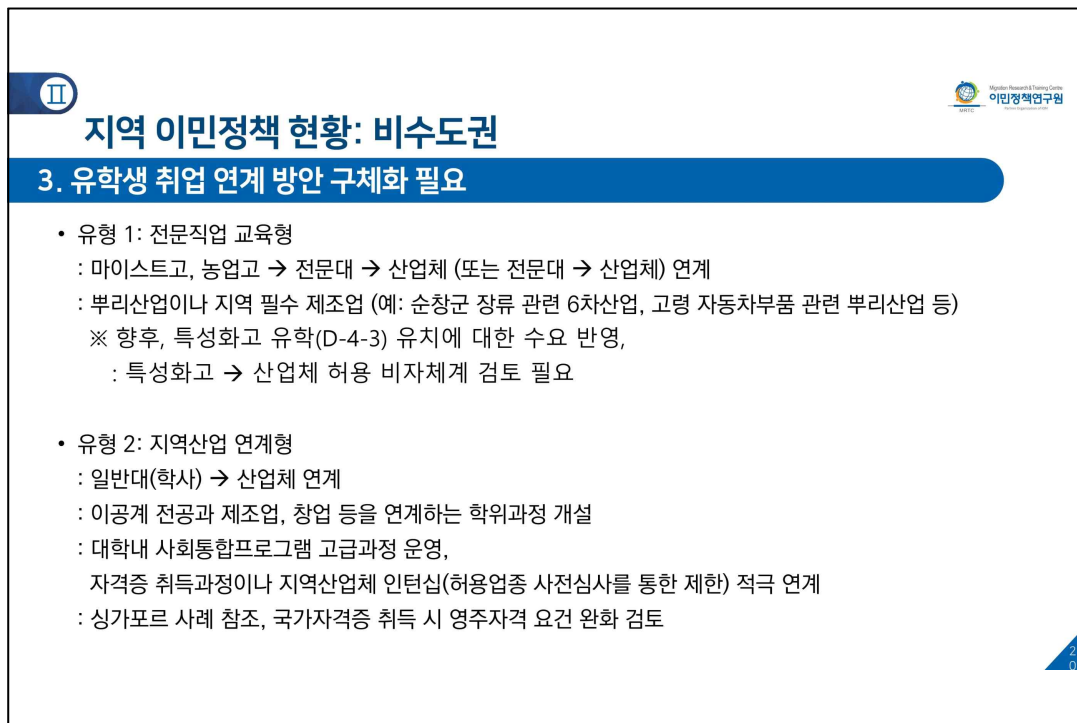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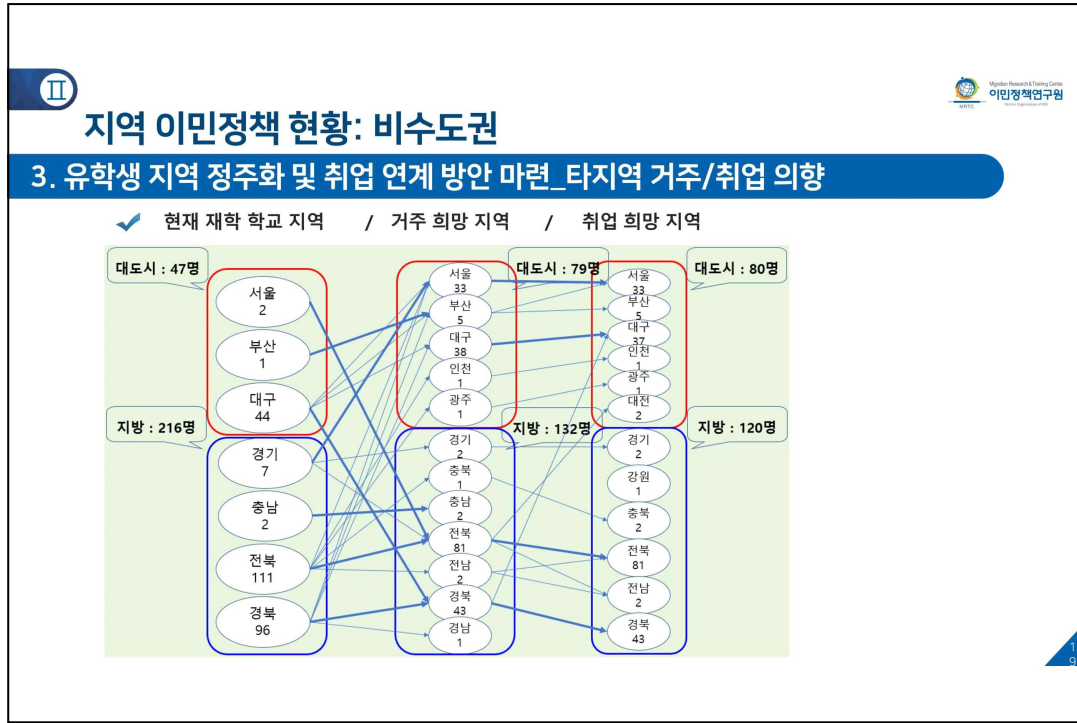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30	43.2
	여자	171	56.8
	총계	301	100.0
연령대	20세 미만	6	2.2
	20세 이상 - 25세 미만	140	52.4
	25세 이상 - 30세 미만	94	35.2
	30세 이상	27	10.1
	총계	267	100.0
체류지역	D-2(유학)	220	73.1
	D-10(구직)	56	18.6
	D-4(아학연수)	8	2.7
	기타	17	5.6
전체	301	100.0	
국내 체류 기간	1년 미만	28	9.6
	1년 이상 - 2년 미만	26	8.9
	2년 이상 - 3년 미만	19	6.5
	3년 이상 - 4년 미만	34	11.7
	4년 이상 - 5년 미만	60	20.6
	5년 이상 - 6년 미만	64	22.0
	6년 이상 - 7년 미만	34	11.7
	7년 이상	26	8.9
총계	291	100.0	

구분	빈도(명)	비율(%)	
출신국가	베트남	169	56.3
	몽골	41	13.7
	우즈베키스탄	28	9.3
	중국	21	7.0
	미얀마	9	3.0
	스리랑카	7	2.3
	기타	25	8.3
총계	300	100.0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54	18.8
	이혼	1	0.3
	결혼한 적 없음	232	80.8
동거인수 (본인 포함)	총계	287	100.0
	1명	144	53.5
	2명	89	33.1
	3명	24	8.9
	4명 이상	12	4.5
가족 동거 여부	계	269	100.0
	가족 동거	54	19.3
	비가족 동거	226	80.7
국내 수확 과정 (최종 학력 기준)	계	280	100.0
	어학연수	45	15.5
	전문학사	57	19.7
	학사	120	41.4
	석사	61	21.0
	박사	7	2.4
전공	계	290	100.0
	인문사회	140	53.0
	공학	68	25.8
	자연과학	26	9.8
	예체능	18	6.8
	보건의료	12	4.5
	총계	264	100.0

주: 기타 출신국가: 나이지리아(5), 방글라데시-필리핀(3), 태발-러오스-일본-태국(2), 인도-키프리스-타타-타지키스탄-인도네시아(1)

18



II

지역 이민정책 현황: 비수도권



3. 유학생 취업 연계 방안 구체화 필요

- 유형 3: 미래산업 선도형
 - : 이공계 특성화대학, RISE 협력대학 → 지역 첨단산업, 신산업, 지역연구소, 산학연구단지 연계
 - : 최근 스웨덴, 핀란드 유학생 우수인재 유치 전략, one-stop 서비스 체계 구축 참조
 - :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 확대 방안 검토
 - 수도권 외 비수도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해당 대학 선정, 지역별 산업군 지정 등 세밀한 계획 요구됨
- 유형 4: 국가산업 육성형
 - : 국가의 중장기 필수인력 육성 (예: 보건의료, 조선업 등)
 - : 중장기적 필요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증 요구 업종 지정
 - : 연차별 도입규모 및 절차를 마련하여 체계적 인력 양성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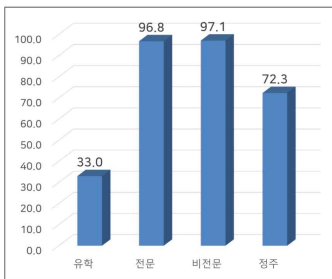
II

지역 이민정책 현황: 비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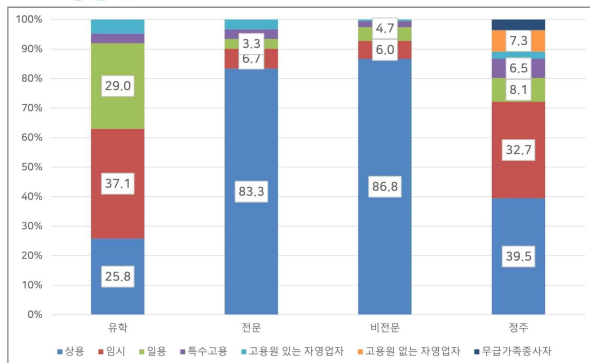


4. 노동환경 : 정주형 이민자의 고용안정성 증진

▶ 고용률



▶ 고용형태



22

II

지역 이민정책 현황: 비수도권



4. 노동환경 : 유학생 / 결혼이민자 등의 노동환경 개선

구분	월 급여 (만원)	주당 근무시간 (시간)	시간당 급여 (만원)	근속기간 (개월)
유학	144.65	32.70	1.02	17.99
전문인력	271.25	49.64	1.26	53.41
계절근로	197.42	55.88	0.82	4.83
비전문취업	250.23	49.82	1.16	32.18
선원취업	228.35	76.45	0.69	23.07
방문취업	264.53	47.23	1.29	14.90
거주	259.62	47.17	1.27	33.65
재외동포	245.13	37.51	1.51	28.49
영주	255.86	40.60	1.45	36.83
결혼이민	193.88	37.51	1.19	31.73

주: 시간당 급여=(월 급여*52)/(주당 근무시간*52)로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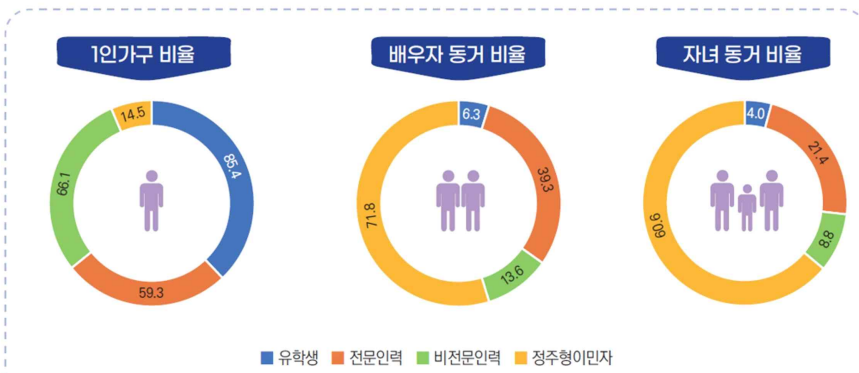
II

지역 이민정책 현황: 비수도권



5. 가족이민 대응_가족구성 / 비전문인력 가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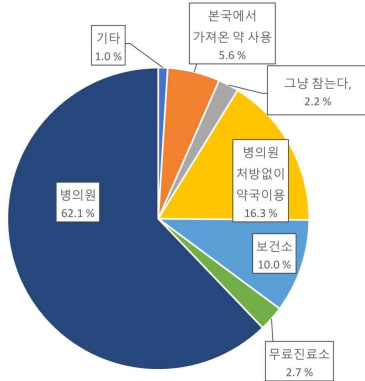
II

지역 이민정책 현황: 비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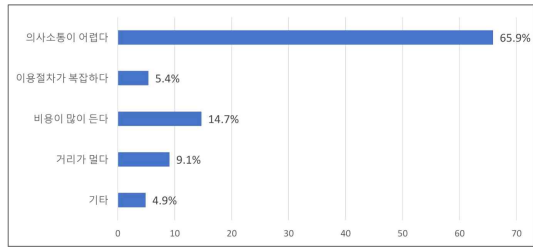


6. 생활인프라 마련 (예: 보건의료 접근성)

▶ 보건의료 이용행태



▶ 이용 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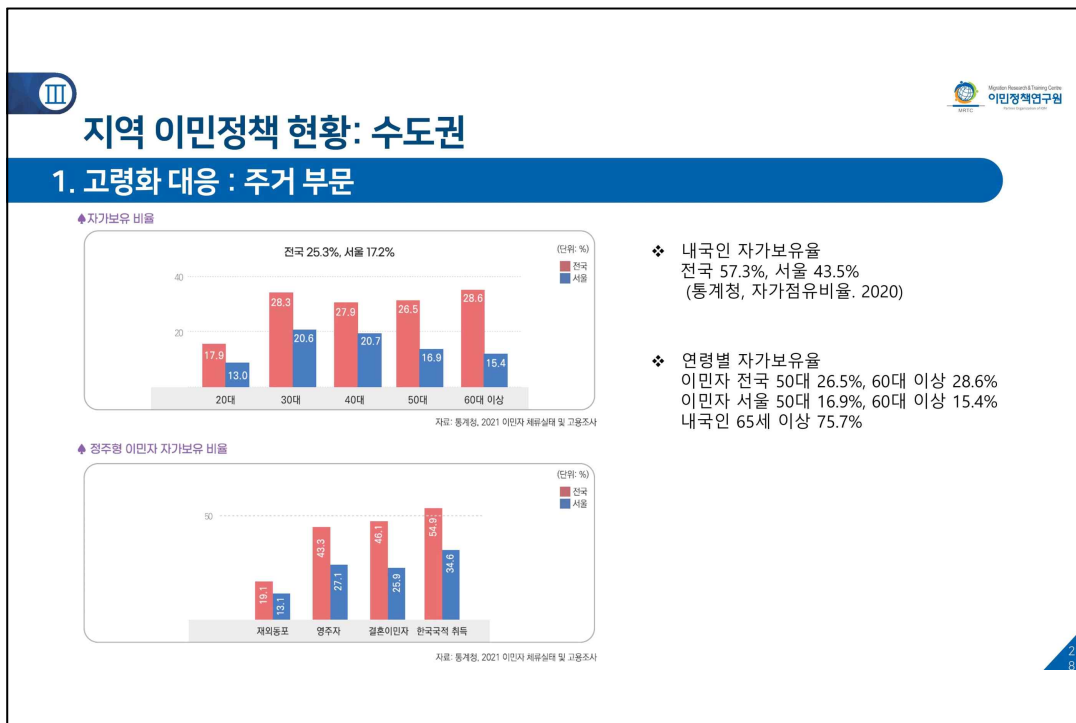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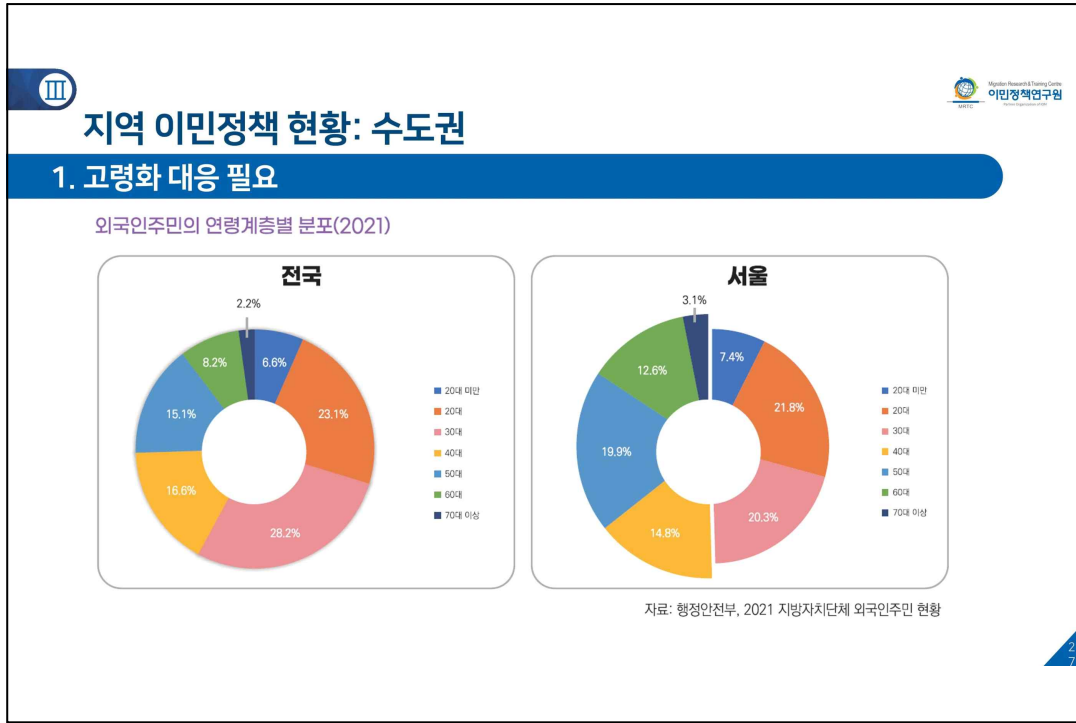


- 약 25.2%는 의료기관 이용하지 않고 약 처방하거나 참음
-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어려움
 - 동포 관련 체류자격(방문취업, 재외동포, 영주) “비용” 문제
 - 권역2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 높은 편



지역 이민정책 현황: 수도권





III

지역 이민정책 현황: 수도권



1. 고령화 대응 _ 사회보장

(단위: %)

구분	귀화자	결혼이민자	전체
	비율(%)	비율(%)	비율(%)
생계급여	18.1	13.3	16.0
의료급여	19.1	16.8	18.1
주거급여	17.5	13.6	15.8
교육급여	21.8	24.0	22.7

자료: 서울시 다문화가족실態조사(2022)
 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생계급여	13.0	14.4	11.2	9.6	43.1	16.0
의료급여	13.0	16.1	13.4	13.0	47.0	18.1
주거급여	11.1	13.8	13.0	11.0	40.0	15.9
교육급여	26.9	23.9	17.8	12.2	40.0	22.7

자료: 서울시 다문화가족실態조사(2022)
 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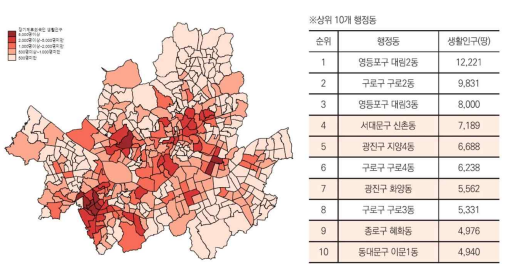
지역 이민정책 현황: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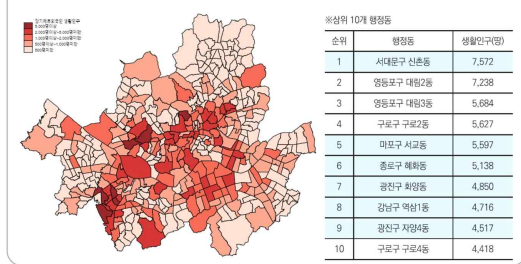
2. 생활인구 분포 (서비스 제공)

서울시 행정동별 주·야간 장기체류외국인 생활인구 분포 비교(2022)

야간 생활인구 (03시 기준)



주간 생활인구 (15시 기준)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생활인구(장기체류외국인) 내부자료 (2022년 4월 4일 기준 데이터 추출).
 박민정·김도원, 서울시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를 통해 본 정책현안: 장기체류외국인 생활인구 분석, 이민정책연구원, 2022, 재인용

III

지역 이민정책 현황: 수도권



2. 생활인구 분포 (밀집화 대응)

자치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계	32,282	총계	40,877	총계	39,674	총계	37,108	총계	39,083	총계	43,226
영등포구	대림2동	5,993	대림2동	7,206	대림3동	7,156	대림2동	7,836	대림2동	9,697	대림2동	12,221
	대림3동	5,395	대림3동	6,455	대림2동	6,335	대림3동	5,766	대림3동	6,815	대림3동	8,000
	여의동	4,333	영등포구	3,890	영등포구	4,600	대림1동	3,532	대림1동	3,662	대림1동	4,457
	영등포동	3,653	대림1동	3,617	대림1동	2,958	영등포동	2,837	영등포동	2,638	도림동	2,658
	대림1동	3,057	도림동	2,979	도림동	2,956	도림동	2,837	도림동	2,516	영등포동	2,455
	영등포동	2,156	신길3동	2,411	신길3동	2,310	신길1동	2,482	신길1동	2,184	신길3동	1,894
	신길3동	1,392	신길1동	2,304	신길1동	2,171	신길3동	1,818	신길3동	1,737	신길1동	1,863
	총계	27,666	총계	32,746	총계	31,989	총계	33,251	총계	33,798	총계	36,560
구로구	구로3동	5,227	구로2동	8,061	구로2동	7,734	구로2동	9,767	구로2동	8,428	구로2동	9,831
	구로4동	5,018	구로4동	5,326	구로4동	5,026	구로4동	4,678	구로4동	5,444	구로4동	6,238
	구로2동	5,017	구로3동	4,872	구로3동	4,144	구로3동	4,151	가리봉동	4,977	구로3동	5,331
	구로5동	3,490	구로5동	3,932	구로5동	3,533	가리봉동	3,469	구로3동	4,493	가리봉동	4,892
	가리봉동	2,918	가리봉동	3,779	가리봉동	3,134	구로5동	3,441	구로5동	3,419	구로5동	3,603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생활인구(장기체류외국인) 내부자료 (2022년 4월 4일 기준 데이터 추출).
 박민정·김도원, 서울시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를 통해 본 정책현안: 장기체류외국인 생활인구 분석, 이민정책연구원, 2022, 재인용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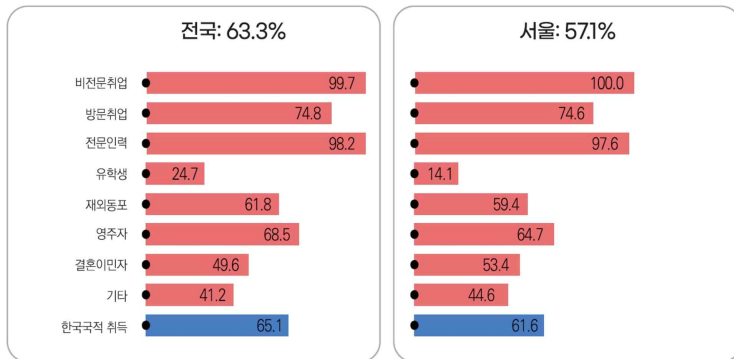
지역 이민정책 현황: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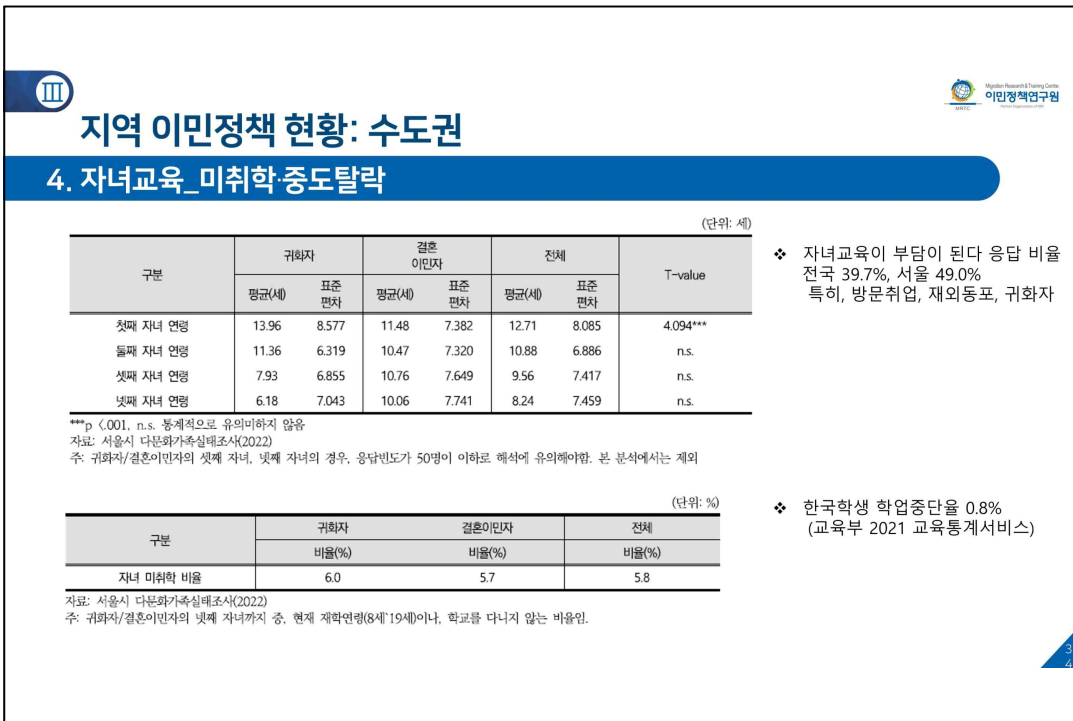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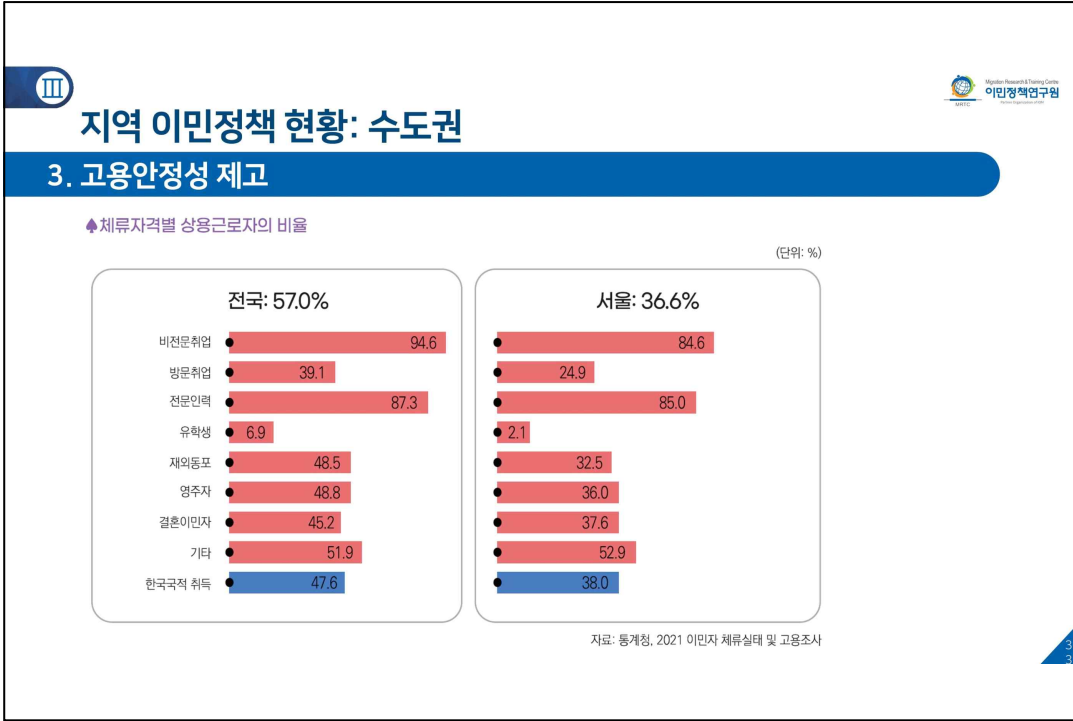
3. 고용안정성 제고

◆ 체류자격별 고용률

(단위: %)



자료: 통계청, 2021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감사합니다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 분포와 정책 방향

김영혜 (선임연구위원, 정책연구실장)



목 차

1. 들어가며
2.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규모와 구성
3.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지역별 유형별 분포
4. 정책방향

1. 들어가며



1. 들어가며



• 경기도 및 31개 지역의 외국인주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외국인주민의 인구분포 특성 파악이 가장 우선

• 경기도에는 총인구의 5.2%에 달하는 714,497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명실상부하게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이며(행안부, 2022), 다양한 외국인 인구의 특성을 지닌 31개의 기초자치체가 있어서, 이러한 외국인주민 인구 구성을 고려한 외국인주민 정책의 필요성 있음.

- 외국인주민의 유입과 그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의 증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지지만(박세훈·정소양, 2010), 다른 측면으로 우리사회에 계층 간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임.

• 외국인주민 정책을 수립하여 다문화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의 분포를 살펴보고자 함. 외국인주민 유입에 부응하는 지역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외국인주민의 특성 파악이 우선적임.

- 특히 입국 목적과 관련되는 체류자격을 중심으로 분포의 특징을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도출하여, 외국인주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2.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규모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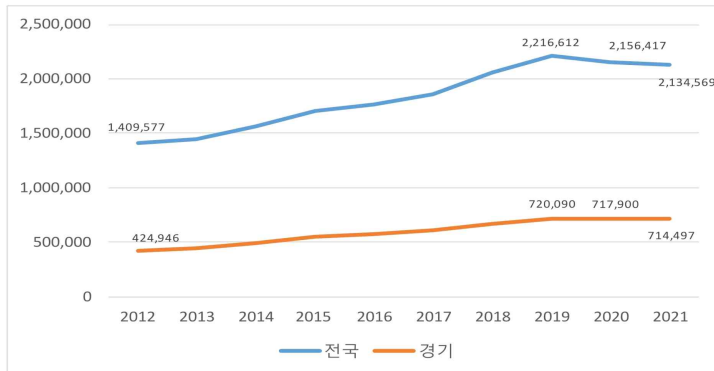
가.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규모



- 10년간 경기도 외국인주민 규모 추이는 전국과 유사한 경향
- 2012년 424,946명(전국의 30.1%)이었고, 이후 증가하여 2019년 720,090명으로 정점 도달, 코로나19로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으로, 2021년 외국인주민 수는 714,497명(전국의 33.5%)

[그림 1] 전국 및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증가 추이

(단위: 명)



자료: 행정안전부, 2022.11.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가.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규모



- 외국인주민의 유형별로는 전국 외국국적동포의 무려 43.4%가 경기도에 거주하며, 외국인근로자의 38.2%가 경기도에 있음.
- 반면 전국 유학생의 14.3%만이 경기도에 있고,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또한 전국의 26.5% 수준으로 평균 비율(33.5%)에 비해 낮으며, 결혼이민자도 전국의 31.2%로 평균 비율보다 낮음.

[표 1] 전국 및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외국인 주민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전국	51,738,071 (100.0)	2,134,569 (100.0)	1,649,967 (100.0)	395,175 (100.0)	174,632 (100.0)	156,607 (100.0)	368,581 (100.0)	554,972 (100.0)	210,880 (100.0)	273,722 (100.0)
경기도	13,652,529 (26.4)	714,497 (33.5)	571,204 (34.6)	151,037 (38.2)	54,467 (31.2)	22,358 (14.3)	160,110 (43.4)	183,232 (33.0)	70,768 (33.6)	72,525 (26.5)

자료: 행정안전부, 2022.11. |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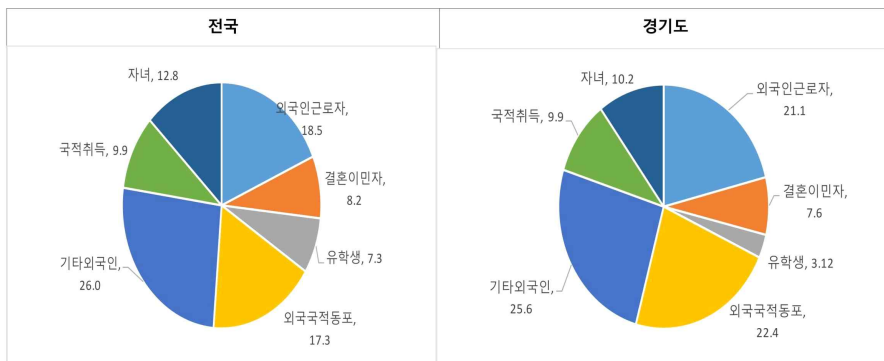
나.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구성 : 유형별 구성



- 경기도 외국인주민 유형은 전국과 마찬가지로 기타외국인(25.6%)이 가장 많고, 외국국적동포(22.4%), 외국인근로자(21.1%), 외국인주민 자녀(10.2%), 국적취득자(9.9%), 결혼이민자(7.6%), 그리고 유학생(3.1%) 순
- 경기도는 전국에 비해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높음. 국적취득자 비율은 9.9%로 전국과 경기도가 동일

[그림 3] 전국 및 경기도 외국인주민 구성 비율

(단위: %)



자료: 행정안전부, 2022.11. |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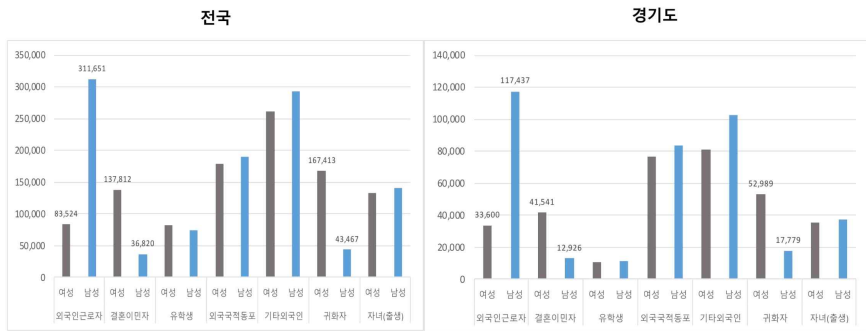
8

나.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구성 : 성별 구성



- 전국과 경기도 모두 외국인주민의 유형에 따라 성별 구성이 상이,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외국인주민 자녀(출생)는 남성이, 결혼이민자, 유학생, 귀화자는 여성의 수가 많음.
- 성별 차이가 두드러진 유형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그리고 귀화자로, 경기도의 외국인근로자 151,037명의 77.8%는 남성이고, 54,467명의 결혼이민자 중 76.3%는 여성이며, 70,768명의 경기도 귀화자의 74.9%가 여성

[그림 4] 전국 및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성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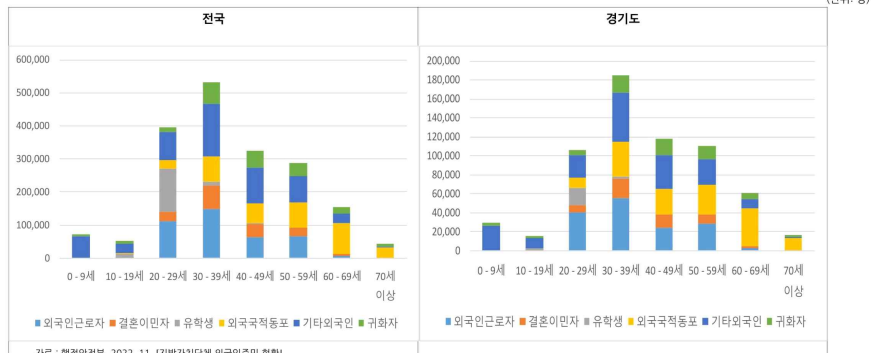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2022. 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나.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구성 : 연령별 구성



- 경기도와 전국 모두 30대가 가장 많지만, 전국은 20대, 40대 순, 경기도는 40대, 50대 순
- 외국인주민의 유형별 연령 분포는 전국과 경기도가 유사하며, 외국국적동포는 60대와 70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수가 많고, 외국인근로자는 30대가 가장 많은 가운데 2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결혼이민자는 30대, 유학생은 20대에 집중

[그림 5] 전국 및 경기도 외국인주민 연령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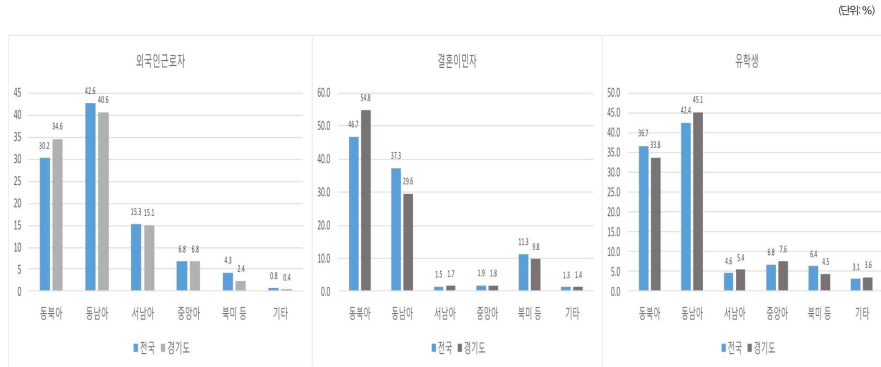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2022. 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주: 외국인주민 자녀 제외

나.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구성 : 국적별 구성 (1)

- 외국인근로자는 전국과 경기도 모두 동남아, 동북아, 서남아, 중앙아 순. 경기도(34.6%)는 전국(30.2%)에 비해 높은 동북아 비율.
- 결혼이민자는 전국과 경기도 모두 동북아, 동남아, 북미 등 순. 경기도(54.8%)는 전국(46.7%)에 비해 동북아 비율이 월등히 높음.
- 유학생은 전국과 경기도 모두 동남아, 동북아, 중앙아 순. 경기도는 동남아(45.1%)와 서남아(5.4%), 중앙아(7.6%) 비율이 높음.

[그림 6] 전국 및 경기도 외국인주민 국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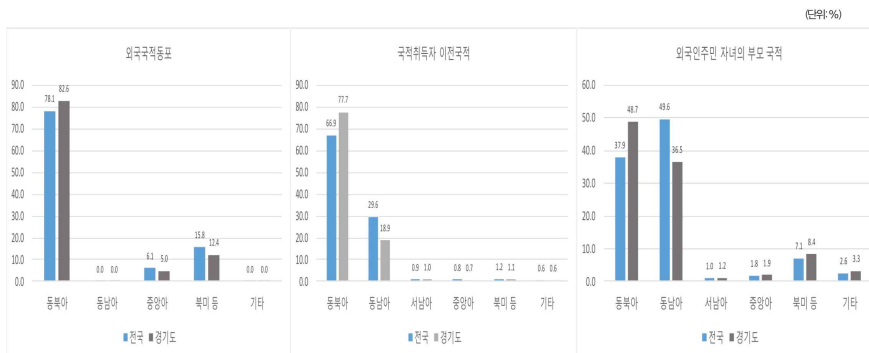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2022. 11.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나.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구성 : 국적별 구성(2)

- 외국국적동포는 절대다수가 동북아, 그 다음 북미 등, 중앙아 순. 경기도는 동북아의 비율이 더욱 높음.
- 국적취득자의 이전 국적은 동북아, 동남아, 북미 등의 순. 경기도는 동북아시아의 비율(77.7%)이 현저하게 높음.
- 외국인주민 자녀(출생)의 부모 국적은 전국과 경기도의 경우가 다소 상이함. 전국의 경우 동남아, 동북아, 북미 등 순이고, 경기도는 동북아 비율이 48.7%로 가장 높고, 동남아, 북미 등 순.

[그림 6] 전국 및 경기도 외국인주민 국적분포



자료: 행정안전부, 2022. 11.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4. 정책방향



• 지역의 외국인주민 정책은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인 정책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외국인주민 분포 특성을 고려, 집중거주지 중심의 정책, 희소거주지 혹은 농촌지역 정책 필요

- 지역의 외국인주민 정책은 중앙정부의 출입국 관련 정책과는 구분되는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인 정책이어야 함. 지역사회는 외국인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이를 통해 타국생활에 대한 적응과 정착을 도모하는 일차적인 장소이기 때문임.
-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주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유형별 외국인주민 분포를 살펴보고, 그 결과 나타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도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경향**임. 경기도 '서남부지역 대도시'에 외국인주민이 집중 거주하고 있음. 외국인주민 수와 비율이 가장 높은 '안산시'를 필두로 '수원시', '화성시', '시흥시', '부천시'의 5개 지역에 전체 외국인주민의 절반 가까이가(47.7%) 거주 중.



◆ 선행연구에서 외국인 거주지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장 및 공동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 직장 또는 공동체 중심으로 거주하는데, 체류 목적지 주변에 거주함으로써 제한된 지역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고자 하며, 기존 공동체 인근에 거주하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등을 얻고 모국출신 이주민과의 친목도모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 찾음(이진영 외, 2012).

◆ 이러한 이유로 안산시 등 집중거주지는 향후로도 외국인주민 유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집중거주지역은 외국인주민 대상 정책과 다문화친화적 지역사회정책에 역점을** 둘 필요 있음.

4. 정책방향



◆ '과천시', '구리시', '의왕시' 등 서울인접 소규모 인구 도시는 외국인주민이 희소한 지역으로, 지역사회에서 소수집단인 이들이 **주류 사회에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또한 이들 외국인주민 희소거주지역은 인근 지역과 인프라를 공유하거나 공동 체사업을 협업하는 등의 시도가 필요함.



◆ 특히, 농촌지역인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등 인구감소 위기에 놓여있는 이들 농촌지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주민 자녀 등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역할의 기대가 높음. 따라서 향후 이들이 **미래의 농촌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그리고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특정지역 집중 정도가 높은** 편임. 외국인근로자는 4개 지역에 도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42.5%가 거주 중이고, 유학생은 5개 지역에 58.3%, 외국국적동포는 4개 지역에 51.8%가 거주 중임.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화성시(전체의 14.6%)에 가장 많고, 유학생은 수원시(전체의 20.2%)에 가장 많이 거주함. 안산시에는 결혼이민자(전체의 9.9%), 귀화자(전체의 12.8%), 외국국적동포(전체의 17.8%), 그리고 외국인주민 자녀(전체의 8.2%)가 가장 많이 분포함.

◆ 현재의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은 시·군별 외국인주민의 분포 유형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없음. 지역 외국인주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별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주민 정책 수요에 대응할 필요** 있음. 연천군에는 한 명의 유학생도 없지만, 수원시에는 도 전체 유학생 5명 가운데 1명이 거주하는 현실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박세훈·정소양(2010).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제64권: pp.59-76.
- 이영민·김수정(2017). 인천시 외국인 이주자의 분포 특성과 다문화 로컬리티에 대한 예비적 연구:출산국가와 체류유형을 중심으로. 로컬리티인문
학제17권: pp.197-238.
- 이진영·남진(2012). 수도권에서 외국인 거주지 분포의 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제47권 1호: pp.85-100.

감사합니다

인천의 인구·재외동포 정책 동향 및 관련 구상*

김수한(인천연구원)**

I. 개요

- 한국은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산업현장의 일손 부족 등 인구문제가 심각
- 윤석열 정부는 기존 인구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저출산 완화’에서 ‘인구감소 적응’으로 인구정책의 기조를 전환. 정부의 인구정책 기조 조정에 따라 이민을 통한 경제인구 확충 논의가 확산
- 법무부는 이민·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 관리청’ 신설을 추진. 전국 여러 지자체가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타당성 등 논리를 개발하여 유치 활동 전개하고 있음
-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24.6.18) 발제를 위해 작성한 이 글은 인천의 인구 규모 및 추세, 인구정책 그리고 최근 대두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정책 내용 및 특징을 소개함
- 이를 통해 인천 특유의 인구 및 산업구조, 그리고 최근 재외동포 협력을 중심으로 한 관련 시정 구조 및 정책 지향의 변화 양상 등 지역 현황 및 이에 따른 재외동포 관련 인구정책 구상에 관해 토론함

II. 인천의 인구 규모 및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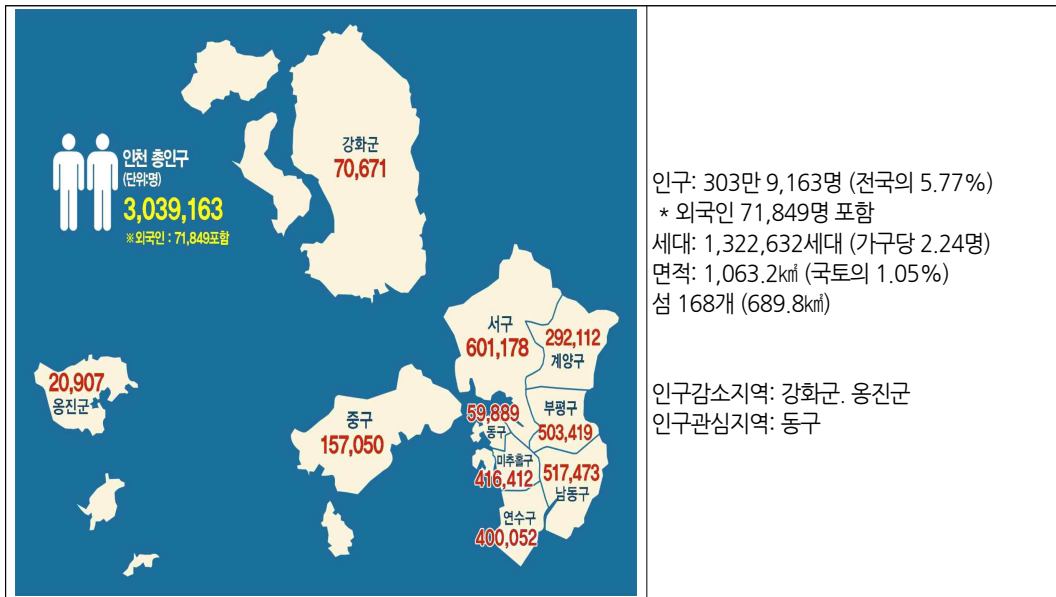
- `23년 1월 기준 인천의 인구는 303만 9,163명으로 전국의 5.77%에 해당하며 그 가운데 외국인은 7만 1,849명으로 2.36% 비중

* 회의 발제를 위해 작성한 글 내용은 발표자 견해이며 소속기관·인천시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음.

**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국제·중국), 재외동포연구단장·인차이나포럼 책임

- 강화군(7만 671명), 옹진군(2만 907명)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동구(5만 9,889명)가 인구관심지역에 포함

〈그림 1〉 인천시 인구 현황 (23.1)



출처: 인천시 홈페이지

- 인천. 2030년 초고령 사회 진입. 2047년 총부양비 88.2% 전망
 - 인천시 총인구는 2035년에 305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인천시 연령별 인구를 살펴보면 고령인구는 점차 증가하나 유소년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피라미드 모양도 2020년 역삼각형에 가까운 항아리 구조로 전환²⁾
 - 인천시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기준 2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0.9%를 차지. 계속 감소 2045년에는 156만 명으로 53.1%에 이를 것으로 추계
 - 고령인구는 2025년 5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 전망. 2030년 전체 인구의 23.7%로 초고령 사회 진입 예상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총부양비는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 인천시 총부양비는 2047년에 88.2%가 될 것으로 전망

2) 인천시 인구모형에 관한 내용은 이인재 외(2020: 65-79), 인천시 지역별 인구에 대해서는 이왕기(2020) 참고.

〈표 1〉 인천시 장래인구 추계(2025-2047)

(단위: 천 명/%)

구분	2025		2030		2035		2040		2045		2047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합계	2,990	100	3,031	100	3,048	100	3,031	100	2,978	100	2,947	100
0~14세	321	10.7	292	9.6	291	9.6	295	9.7	278	9.3	268	9.1
15~64세	2,120	70.9	2,022	66.7	1,890	62.0	1,736	57.3	1,621	54.4	1,566	53.1
65세 이상	550	18.4	718	23.7	867	28.4	999	33.0	1,080	36.3	1,113	37.8

인천 전체 / 세대별 인구 추이

인천 세대별 인구 비중 추이

출처: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자료 정리하여 작성

Ⅲ. 인천의 인구정책 동

○ 인천의 인구정책 - 저출산 완화에 초점

- 인천시 `21년 11월,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 인천시는 여성가족국을 총괄부서로 하여 산하에 △인구가족과 △여성가족과 △노인정책과 △영유아정책과△아동정책과△청소년정책과의 성별·세대별로 업무가 특화된 부서 운영

○ 인천시 인구정책 및 부서의 업무·기능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성·세대·가족 맞춰진 저출산 완화형임

- 여성가족국은 물론 경제·산업 부서에도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에 포함된 외국인 인력 유입을 통한 경제활동인구의 확충 계획은 미비
- 인천 인구정책의 중장기 5대 전략을 제시한 2020년 인천연구원의 인구정책 종합연구에 서도 신 인구집단 관련 정책은 주로 정착지원에 한정3)

〈표 2〉 인천시 2023년 업무계획의 인구·사회 관련 사업 목표 및 내용

목표	사업내용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영위하기 위한 노인복지 구현	노인 예우 강화 및 인프라 확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46,051→46,646명), 소득창출형 일자리 확대(인천형노인적합일자리 발굴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및 취약 노인 생활안정 지원
함께 일하며 함께 만드는 여성평등한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연구기능 통합('22.~'23년) 양성평등 정책기반강화 경력단절 없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임신부터 육아까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인천	임부부 시술비 지원(40.8억원) 출생아동에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13,723명), 공보육 어린이집 확충 아이와 함께하는 보육 친화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19.~'24년)
아동이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인천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및 운영지원 자립준비청년의 맞춤형 자립지원 체계구축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보호인프라 확충 결식아동 급식지원(급식카드 시스템 개선, 방학·명절 대비 실태점검 등)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시 조성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성장 기반 강화 청소년특화시설조성('21.~'26년), 청소년참여·소통프로그램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건강한 가정, 행복한 인천 조성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지원 552.3억원)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및 자립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 다문화 감사 파견,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일자리전담인력·다문화가정 돌봄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운영 -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 -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그램

출처: 인천시(2023). 업무계획. pp.20-22. 내용 정리하여 작성

IV. 인천의 재외동포·외국인 정책 동향

1.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국제·외국인 기반의 수렴

○ 인천은 2023년 재외동포청 유치를 기회로, 세계 한인네트워크의 거점으로 발돋움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수립

3) 인천시 인구정책 중장기 방향에 관한 내용은 이인재 외(2020:220-224; 196-200) 참고.

- 재외동포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협력을 위한 조례」(23.12.29) 공포. 재외동포의 지역사회 활동 및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 인천시는 조직 개편(24.1) 통해 재외동포청과 지역발전을 연계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국급)을 신설. 재외동포협력기획과, 디아스포라유산과, 투자유치과, 국제교류증진과 등 4과 16팀 구성

〈표 3〉 인천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재외동포 관련 주요 업무계획(2024)

구분	전략	주요과제
재외동포협력 기획과	재외동포 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 도시 인천 프로젝트 추진 •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인천시 특화된 재외동포정책 발굴을 위한 용역 추진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 기념행사 • 재외동포 관련 주요행사 유치 및 지원 •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연계 재외동포 초청
	차세대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재외동포 모국 연수 • 차세대 재외동포 관련 유관기업 사업 연계 추진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 인천방문의 해 추진 • 재외동포 인천방문의 해 협업TF 구성 및 운영 •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홍보 추진
디아스포라 유산과	외국인과 공존하는 지역공동체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 재외동포(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상호존중을 기반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재외동포를 위한 열린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 재외동포웰컴센터 운영
투자유치과	다문화가정 돌봄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의료 돌봄 지원
	한인비즈니스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한인비즈니스센터 설립 • 한인비즈니스 투자유치 IR 행사추진 •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투자기반 마련

출처: 인천시 자료 정리

2. 외국인 친화도시 정책

- 인천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디아스포라유산과가 외국인·다문화 정책의 주무과임. 디아스포라유산과는 「제1차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제정함
 - 외국인 친화도시 개념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화목하게 어울리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외국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를 위한 정책추진으로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 도시로 정립함
 - 기본계획은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인천’을 비전, 정책목표로 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② 상호소통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 ③ 외국인 인권가치 존중사회 ④ 정책참여 활동기반 강화를 설정함

〈표 4〉 인천시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조성 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세부사업

정책목표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추진부서
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1.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필수역량 강화	
	① 단계별·수준별 한국어 교육 지원	디아스포라유산과
	② 기초법질서 및 문화, 각종 제도 교육	디아스포라유산과
	③ 결혼이민자 학력신장(검정고시) 사업	디아스포라유산과
	2.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모임 활성화	
	① 콜센타를 통한 종합상담, 통·번역 지원	디아스포라유산과
	② IFEZ 글로벌센터 운영	경제청 투자유치기획과
	③ 동아리모임 활동 지원(자조모임)	디아스포라유산과
	④ 다문화가족 소통교류공간 운영	디아스포라유산과
	⑤ 문화체육 체험활동 지원	디아스포라유산과
	⑥ 외국인주민 국가별 기념행사 지원 신규	디아스포라유산과
	⑦ 외국인편리음식점 지정관리	위생정책과
	⑧ With AI 다국어 의료서비스 실증 확대	데이터산업과
	⑨ 외국인지원시설 확충 확대	디아스포라유산과
	⑩ 외국인지원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신규	디아스포라유산과
	⑪ 비자 등 원스톱서비스 지원 중앙부처 건의	디아스포라유산과
	3. 외국인 경제사업을 위한 지원기반 구축	
	① 외국인근로사지원센터 운영 신규	디아스포라유산과
	②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사 정착 지원 신규	경제정책과
	③ 다문화가족 일자리 지원사업	디아스포라유산과
	④ 결혼이민자 통번역 인력풀 운영	디아스포라유산과
⑤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 지원	여성정책과	
⑥ 외국인유학생 행정인턴 지원	디아스포라유산과	
⑦ 외국인청년 유학생 취업지원 신규	관련부서협의	

출처: 2024년 인천광역시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표 4〉 인천시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조성 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세부사업 (계속)

정책목표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추진부서
② 상호소통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	1. 내·외국인 참여하는 어울림의 장 마련	
	① 세계인의 날 행사 추진	디아스포라유산과
	②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디아스포라유산과
	2. 문화다양성 이해혁신을 통한 인식개선	
	① 외국인사물놀이단 운영	디아스포라유산과
	② 글로벌 어린이합창단 운영	디아스포라유산과
	③ 다문화 야구단 운영지원 신규	체육진흥과
	④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추진 확대	디아스포라유산과
	⑤ 다양성 존중 인식개선 콘텐츠 발굴 신규	디아스포라유산과
	⑥ 외국인 인식개선 방송프로그램 제작 신규	디아스포라유산과
	⑦ 내·외국인 참여 소통 프로그램 운영 지원	디아스포라유산과
	⑧ 디아스포라 영화제 개최	문화정책과
	⑨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 개최 신규	관광마이스과
	⑩ 어울림터(다국어) 자료실 및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미추홀도서관
	3. 동포의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유대감 증진	
	①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운영 신규	디아스포라유산과
	② 인천 함박마을 문화축제 신규	예술정책과
	③ 사할린동포 입소시설 운영지원	노인정책과
	④ 안전한 우리동네, 고려인과 함박웃소(도시재생)	도시균형정책과
	⑤ 외국국적동포 한국어능력 향상지원 신규	디아스포라유산과
③ 외국인 인권가치 존중사회	1. 외국인인권존중 안전사회 구현	
	①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여성정책과
	② 다문화 위기가정 가족치료 사업	디아스포라유산과
	③ 다문화가족 의료돌봄서비스	디아스포라유산과
	④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보건의료정책과
	2.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 성장 지원	
	①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영유아정책/디아스포라유산과
	② 외국인 자녀 학습지원 신규	디아스포라유산과
	③ 다문화 자녀 멘토링 사업	디아스포라유산과
	④ 다문화 자녀 진로설계 사업	디아스포라유산과
	⑤ 다문화 자녀 기초학습지원	디아스포라유산과
	3. 위기에 처한 외국인 지원	
	① 시민안전보험 외국인 지원	안전상황실
② 취약외국인 사례관리 강화 및 긴급지원 확대	디아스포라유산과 복지정책과	
④ 정책참여 활동기반 강화	1. 소통하는 외국인행정 체계구축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운영	디아스포라유산과
	②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디아스포라유산과
	③ 외국인주민단체 네트워크 구축	디아스포라유산과
	④ 외국인친화도시IT/F추진단 운영 신규	디아스포라유산과
	2.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외국인 참여 활성화	
	① 외국인 인천생활 지키미 운영 신규	디아스포라유산과
	② 시민명예외교관 운영	국제교류증진과
	③ 시 영문소식지(Incheon Now) 집필 참여	홍보기획관

출처: 인천시(2023). 업무계획. pp.20-22. 내용 정리하여 작성

V. 종합 및 시사점: 재외동포와 연계한 인천의 인구정책 구상

1. 정부 이민정책 동향에 대한 지속적 관측과 선제적 대비 필요

- 정부(법무부)가 제기하고 있는 이민정책과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은 기존 ‘외국인 정책’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임
 - 법무부의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정책은 곧 이민정책이며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 사회 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이라고 규정⁴⁾
 - 정부와 법무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민 확대를 통해 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이며 인구정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됨. 지속적인 관측과 대비가 필요

- 따라서 인천시는 정부의 인구정책 기조 변화에 조응하여 시정 방향을 조율하되, 새로운 정책이 가져올 다양한 긍·부정 효과에 대한 대비 필요
 - 대규모 외국인 유입이 가져올 각종 사회적 이해와 가치 충돌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사회적 후과(後果)를 간과하고, 목전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단기적 경제 처방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 보다 깊이 있는 관측과 논의가 필요

- 인천의 인구정책은 저출산 완화에 초점. 우수 외국인·재외동포 인력의 도입 계획 미비. 경제활동인구 확충에 중점을 두는 정부 새로운 인구정책 기조와의 미스매칭 조율 필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시는 최근 ‘외국인친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을 통해 외국인의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제시. 기존의 외국인·다문화정책에 더해 신규로 외국인종합서비스센터의 확충,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재외동포웰컴센터 신설 등 내용을 담는 등 진일보한 외국인 정책을 수립함. 그러나 여전히 신인구집단의 유입보다는 현재 외국인, 다문화가정, 재외동포 등에 대한 적응과 정착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을 위주로 한 정부 시범사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인천 차원의 외국인·

4) 기존 외국인정책과 이민정책 용어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무부 (2023: 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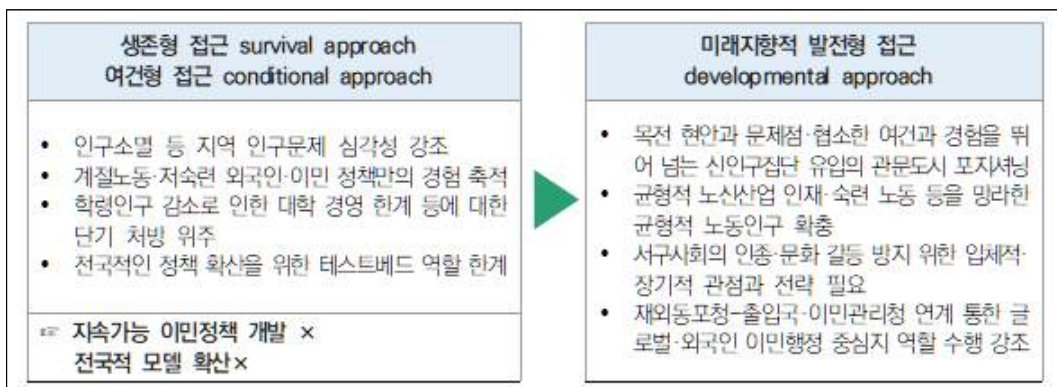
재외동포 우수인력 사업의 발굴 및 상향식 정책 건의 필요

- 인천 산업단지에 맞춤형 지역특화형 외국인·재외동포 산업인력 시범사업의 정부 건의
-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 뿐만 아니라 동구(인구관심지역) 등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2. 이민 및 이민관리청에 대한 미래지향적 발전형 접근

- 국가의 이민정책 및 출입국·이민관리청에 대해 인천은 생존형 또는 여건 적합형이 아닌, 국가의 이민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보다 미래지향적 발전형 접근 필요

〈그림 2〉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위한 지자체 접근 논리의 한계 및 개선 방향



출처: 김수한·전유정(2024:16)

- 인천 역시 장기적으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인구문제가 불거지겠지만, 다른 인구절벽 지역에 비하여 매우 양호한 인구 구조를 이루고 있음. 따라서 목전의 현안과 문제점·협소한 여건과 경험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한 신인구집단 유입의 관문도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우수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다각적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 법무부의 특례비자 프로그램으로 상향식 제안
 - 고기술·신산업 해외 인재에 대한 체계적 유입과 더불어 인천 제조업에 종사하는 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례비자 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 적응 지원, 균형적 외국 노동 인구확충 노력

- 서구사회가 겪고 있는 이민으로 인한 인종·문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접근
 - 우리와 혈연·문화적 동질성 및 유대가 강한 재외동포 인재를 중심으로 이민정책 강화
 - 중국/러시아·CIS 차세대 동포의 유학·취업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적용
- 재외동포청-출입국·이민관리청의 연계를 통해, 인천이 글로벌·외국인 이민행정의 중심지 역할 수행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
 - 법무부와 협력하여 지역대학에 글로벌·외국인 이민행정 공무원 교육·연수과정을 개설
 - 재외동포·외국인 지역적응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

3. 재외한인과 연계한 인천 특화의 우수 재외동포 인력 도입 정책 추진

- 재외동포청 유치를 기회로 삼아, 재외동포와 연계한 인구정책 및 사업을 고안하여 추진
- 이와 관련하여 ①세계 한인 고급인재 유치 ②인천지역 산업 특화형 시범사업 상향식 건의 ③귀환동포 외국인 집거지 상생발전 ④정책 여건 조성을 위한 시민 공감 사업을 제안

〈그림 3〉 재외동포와 연계한 인천의 인구정책 방향 및 과제 제안



출처: 김수한·전유정(2023:11)

4. 재외동포 관련 인구정책 추진 유의점·고려사항

- 정부의 신 인구정책이 가져올 여러 긍정·부정 효과에 선제적으로 대비
 - 인천시는 정부의 인구정책 기조 변화에 조응하여 시정 방향을 조율하되, 새로운 정책이 가져올 다양한 긍정·부정 효과에 대한 대비가 필요
 - 대규모 외국인 유입이 가져올 각종 사회적 이해와 가치의 충돌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사회적 후과(後果)를 간과하고, 목전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단기적 경제 처방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보다 깊이 있는 관측과 논의가 필요

- 국가(지역)·세대·성별 재외동포의 차이점을 고려한 정책 필요
 -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750만 재외동포는 거주국 민족정책의 개방성 정도·사회경제적 발전의 수준·모국인 한국과의 외교관계 등에 따라 매우 다른 특징을 지님. 이에 따라 모국인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여건 및 취업·체류자격의 차이 역시 큼. 이 같은 국가(지역)별 재외동포의 차이에 더해 세대별·성별로도 상이한 특징을 지님
 - 따라서 인천이 정부의 인구정책 변화에 조응하여, 재외동포와 연계한 지역의 인구정책을 펼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국가(지역)·세대·성별 재외동포에 특화된 보다 정밀한 정책의 기획 및 추진이 필요

참고문헌

- 김수한·전유정. (2024). 출입국 이민관리청 관련 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및 시사점. 인천연구원. 이슈브리프.
- _____. (2023). 재외동포와 연계한 인천의 인구정책 방향 검토. 인천연구원 이슈브리프.
- 이인재 외. (2020). 2020 인구구조 변화와 인천시 인구정책. 인천연구원.
- 이왕기. (2020).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 인천연구원 이슈브리프.
- 통계청.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 전망: 2017~2040년.

토 론 문

양원탁(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와 함께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 유출이 심화하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여 2022년에는 0.78명을 기록하였고, 2020년에는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적은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하면서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은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구위기 시대, 지역 이민정책의 형성과정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이민정책포럼은 최근 논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던 이민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출산 장려와 인구경쟁의 제로섬 방식으로 추진되었던 기존의 지역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외국인의 정착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의 인구문제의 도전과제를 모색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로 생각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지역이민정책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세 분의 전문가께서 지역 이민정책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민정책연구원의 박민정 연구위원님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민정책 특성과 과제’를 발표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역 단위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정주형 이민자의 증가와 노동력에서 통합정책으로의 관점 변화, 지역 간 생산성 격차에 대응한 지역 맞춤형 발전 정책의 요구 등으로 설명해 주셨고, 지역과 산업으로 구분하여 현황과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김영혜 선임연구위원님께서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 주민 분포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경기도 외국인 주민의 특성과 분포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특히, 전국 단위와 구별되는 경기도 외국인 주민의 특성을 유형별(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동포 등), 성별, 국적 등으로 구분하여 현황과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일상

생활에 기반한 실질적인 정책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지역별 정책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인천연구원의 김수한 연구위원님께서 ‘인천의 인구·재외동포 정책 동향 및 관련 구상’을 주제로 인천의 정책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특히, 현재 인구 문제 해결 관점에서 빠르게 진전되는 이민정책 논의가 단기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대규모 외국인 유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성을 지닌 몇 안 되는 국가로서 그동안 이민과 외국인 정책에 논의는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이민정책 방향과 원칙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 발전 측면에서 이민정책의 내용적 측면보다는 이해관계자별 추진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는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이민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역 발전 정책은 국가의 경제성장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함과 동시에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사회·경제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기반한 지역 발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방향과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구조가 마련되었고, 오랜 기간의 준비 과정과 지역 내에 추진체계가 확립되었기에 시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정책은 논의의 기간이 짧고 정치, 경제,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해외 사례를 그대로 이식하기도 어려운 분야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이민정책을 어떠한 모형으로 가야 할지, 향후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이민정책 여건과 이민자 유입에 따른 지역사회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 차원의 대응 전략과 역량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역 발전이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여건을 바탕으로 국가의 이민정책 방향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정책은 주민(내국인)과 외국인, 생활 인프라, 문화·복지·사회보장, 산업·경제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이며, 종합적으로 정책의 방향과 체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이민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지역 내 조직과

인력, 거버넌스 등을 마련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계와 연구계에서는 이민정책이 인구감소의 단기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구성하는 하나의 고유한 영역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학제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관련 논의를 축적하고, 이민자 유입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이 정책에 반영되는 환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포럼에서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발표를 해주신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 론 문

이정우(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ILID) 상임연구위원)

제17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민정책포럼을 주최하고 준비해 주신 이민정책연구원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의 인사와 함께 토론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지역이민정책의 현안과 과제에 대하여 훌륭한 발표를 해 주신 박민정 박사님, 김영혜 실장님, 김수한 박사님 등 3분의 발표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외국인정책으로 다루어졌던 이민정책은 중앙정부가 비자발급을 통하여 외국인의 유입 규모와 대상자 선정 등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입국한 외국인은 지역사회로 흩어져 일상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하향식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는 배제되었고, 유입된 외국인들의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지원, 외국인과 주민간의 갈등해소와 통합문제는 지역사회가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비록 늦긴 했지만,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가 이러한 하향식 정책 결정 과정에 변화를 일으켜 주길 바랍니다.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담당자와 연구자들이 폭넓은 정책연구와 정보공유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역이민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토론자로서 발표자와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산업분야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지역이민정책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지방보다는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고,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56%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합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제도를 통하여 기술인재를 유치,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31%가 사회과학, 21.9%가 교육 및 인문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분야 전공자는 3.6%, 제조 및 건설 등 공학 분야 전공자는 20.1%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자율이지만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와 지역사회의 현안을 감안한다면, 유학생을 유치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하고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목표가 글로벌 교육 선도국가 실현(교육부)과 대한민국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법무부)에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지역이민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둘째, 현행 이민정책 체계에서 지역사회가 필요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민자의 유입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지역마다 산업의 특성도 다르고 인구구성, 지역의 재정 및 자원, 공동체의 정체성, 통합역량 등이 다릅니다. 값싼 인력을 활용하는 제조업, 건설업 기업이 소재한 곳에는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중되고, 대학이 많은 곳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거주하듯이 일자리와 지역 특성에 따라 특정 지역에 특정 유형의 외국인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정부의 비자(체류자격) 제도와 연결된 특정 산업단지 유무, 대학의 위치, 저렴한 임대 주택 분포, 선주민의 정착지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는 해당 지역사회에 어떤 외국인이 유입되는지,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이 입국하는지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도 없었으며 이민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이민정책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가 필요한 이민자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지역이민정책은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라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어촌 변화에 대응하는 농어업인 육성방안을 수립하기도 하고, 지역의 시군 농촌기술센터에서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열대작물의 재배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농업과 어업을 이끌 젊은 농어업인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가 원하는 외국인 농어업인을 유도할 수 있을까요?

셋째, 이민자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환영할 수 있을까요?

지역사회에 다양한 이민자가 유입되면 사회통합 비용이 들 것이고, 한정된 지역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이민자와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수용할 이민자를 선정하거나 규모를 결정할 때 참여할 필요가 있고, 도시개발계획과 주택정책, 교육정책 등 다른 정책들을 수립할 때 지역이민정책과 연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자가 지역 재정에 도움이 되는 납세자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경제활동의 주체이며,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 일원임을 주민들이 인정해야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이민정책에 주민들이 지지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나아가 통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저항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이민정책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지원정책이 아니라 이민자를 포함한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정책이라는 대전제를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넷째, 지역의 인구감소 및 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이민정책의 개념과 역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2022년 7월 25일 법무부가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하여 ‘지역 특화형 비자제도’ 시범사업을 공모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확보 차원에서 이민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역이민정책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알맞은 실질적인 지역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막상 지역이민정책이 무엇인지, 지역이민정책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지역이민정책을 통해 어떤 이민자가 유입되고 지역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등을 논의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지역이민정책의 형성과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소통적 담론(communicative discourse)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이민정책은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과 그 정체성의 변화를 불러오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지역이민정책의 형성과정에 동참해야 이민자와 발생

하게 될 갈등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고 변화의 책임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이민정책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어떤 사회로 변화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계획 등 지방자치정책과 주민지원정책 중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¹⁾

따라서 지역사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이민정책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소통적 담론은 정책의 사회적 수용도(social receptivity)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정책의 성패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²⁾

1) 캐나다 노바스코샤 지방정부와 주민의 소통과정을 통하여 고령화와 인구감소, 경제저성장의 문제가 지역의 위기임을 주민들이 공감하고, 수차례 토론으로 '국제이동(이민)을 통한 인구확대,로 지역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책방향에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 신선미, 이동휘, 이정우. 2022. 「지역이민정책의 이해와 실행」. 지역이민정책개발 연구소. 82면.

2) 하연섭. 2010. “정책아이디어, 틀 짓기, 사회적 담론 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8권 2호, 193면.

토 론 문

김혜정(울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복지가족정책연구팀장)

제3세션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운영방안

좌 장: 조영희 연구위원 | 이민정책연구원

패널1: 류형철 공간환경연구실장 | 경북연구원

패널2: 윤향희 책임연구원 | 충남연구원

패널3: 이종철 과장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전체 참석자 참여



토 론 문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운영 관련 의견

류형철(경북연구원 연구위원)

1. 지자체 연구원에서 이민정책 연구의 어려운 점은?

■ 재정적 한계

-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은 항상 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이민정책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예산이 부족하면 연구의 깊이와 범위를 넓히는 데 한계가 생기며, 이는 곧 연구의 질적 수준에도 영향을 미침.
- 예를 들어, 해외 사례를 연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더욱 상세히 수행하는 등의 추가적인 활동이 어려움. 이러한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더불어, 민간 기업이나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 전문 인력 부족

- 이민정책은 매우 복잡하고 다각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지자체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음. 이는 지방의 인구 유출과 맞물려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함.
- 전문 인력이 부족하면, 연구의 깊이가 얕아지고, 정책 제안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연구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또한,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거나, 국내 전문가들을 지방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함.

■ 데이터 부족

- 정책 연구의 기초는 데이터에 달려 있음.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별로 이민 관련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의 기초 자료 확보가 매우 어려움.
- 데이터가 부족하면, 정책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임.

2. 어려움 해소를 위해 네트워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각 지자체가 보유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통해 연구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중복 연구를 방지하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이러한 플랫폼은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정책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 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

- 지자체 간 협력 연구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분담하고, 연구의 깊이를 더함.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음.
- 특정 지역의 산업 구조와 인구 특성을 반영한 이민정책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 (예시) 저희 경북연구원은 최근 국회 예산안 검토 의견서를 통해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활력 창출”이라는 사업을 모색한 바 있음. 이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를 극복하고 지역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기금 투자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구체적으로,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 소속 18개 지방연구원이 매년 공동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이민정책을 개발하는 방안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협의회에서 지방연구원의 공동과제로 추진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

- 정기적인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연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계와의 연계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연구 인력의 질을 높이고,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 정책 연속성 확보

-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연구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정책 변경 시에도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연한 연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음. 중앙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며, 지자체 간의 협력도 강화해야 함.

3. 중앙-지자체 실무분과위원회 등 공무원과 연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정기 회의 개최

- 중앙-지자체 실무분과위원회의 정기 회의를 통해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정기 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자체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 정기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되며, 주요 안건을 미리 설정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필요함.
- 또한, 회의 결과를 문서화하여 모든 관련 부서와 공유함으로써 정책 실행의 투명성과 책

임성을 높일 수 있음.

■ 온라인 협업 도구 활용

- 특공무원들이 언제든지 협업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 공유와 실시간 논의를 촉진해야 함. 이를 통해 지리적 제한을 극복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짐.
- 또한, 온라인 협업 도구를 통해 문서 공유, 실시간 채팅, 화상 회의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함. 특히, 긴급 상황이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 공동 교육 프로그램

-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최신 이민정책 동향, 사례 연구, 정책 실행 방안 등을 다룸.
-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실행이 가능해짐.

■ 피드백 시스템 구축

- 정책 실행 후 피드백을 수집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함.
-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 연구자, 현장 실무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함. 또한, 피드백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4. 도단위, 광역, 시단위의 차별된 체감과 의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 수 있을지?

■ 맞춤형 정책 개발

- 각 단위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함. 도단위, 광역, 시단위의 각 지역은 인구 구조, 경제 상황, 문화적 배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제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예시) 경북연구원은 권역별 외국인주민 및 경북도민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상북도의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이민자 지원 정책을 각각 맞춤형으로 개발함. 농촌 지역에는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한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도시 지역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 공통 의제 설정

-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협력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 각 지역의 특성이 다르더라도,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존재함. 예를 들어, 이민자들의 사회적 통합, 노동 시장 진입, 교육 기회 제공 등은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함. 이러한 공통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음.
- (예시) 경북연구원은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이민자들의 사회적 통합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구상한 바 있음. 아쉽게도 상호 소통부족으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향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찾고자 함.

■ 지역 간 벤치마킹

-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각 지역의 정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벤치마킹은 다른 지역의 성공적인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자치 단체의 정책 개발에 반영하

는 과정임.

- 이를 통해 각 지역은 다른 지역의 우수한 정책을 배우고, 이를 자신의 지역에 맞게 적용할 수 있으며,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 간의 협력과 정보 교류를 촉진함.

■ 의제 우선순위 정립

- 각 단위의 우선순위를 정립하여 상호 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각 지역의 필요와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정립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해야 함.
- 이를 위해 정기적인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각 지역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 방안을 마련함. 이러한 과정은 지역 간의 갈등을 줄이고, 협력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5.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은 어디까지일지...그것을 위한 연구네트워크는 어떤 의제를 대표적으로 제안하면 좋을지?

■ 중앙의 역할

- 중앙 정부는 이민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법적, 재정적 지원을 담당함. 중앙 정부는 국가 차원의 이민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또한, 중앙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이를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함. 법적 지원과 함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이민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예시)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국가 차원의 이민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지자체의 역할

-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방향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을 실행함. 각 지역은 인구 구조, 경제 상황, 문화적 배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
- 지자체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제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함. 또한, 지자체는 정책 실행 후 피드백을 수집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함.
- (예시) 경북연구원은 경상북도의 인구구조와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외국인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이민정책을 개발하고 실행 중임.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함.

■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

- 중앙과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함. 중앙 정부는 정책의 방향 설정과 법적,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 실행과 현장 실태 조사, 주민 의견 수렴을 담당함.
-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중앙과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대표적인 연구네트워크 의제 제안: “광역비자” 실효적 도입 방안

- 연구네트워크는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이민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를 제안함. 그 중에서도 “광역비자”는 지역 이민정책 권한 확보를 위해 강력하게 제안될 전망이다.
- 특히,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이루었을 때, 광역비자는 전국적인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국 단위의 논의가 시급함.
- 이유: 2026년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된다면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정책수단으로 광역비자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됨.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책 조율이 필요함.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산발적인 특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광역비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배경이 됨.

- (예시) 2024년 경북연구원은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가 하반기 정책과제로 의뢰한 “광역비자(R비자) 실효적 도입 방안 연구”를 통해 광역비자의 구체적인 내용, 법적 체계, 추진 기구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 중임.

토 론 문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운영방안

윤향희(충남연구원)

1. 지역의 연구기관의 이민정책 현실

1) 지자체의 요구와 관련된 사항으로 연구 진행

- 지역에서 외국인 관련 연구는 주로 지자체의 관심 분야에 따라 진 행되며 연구원에서 제시 하는 사항을 지자체에서 검토
- 현실적 문제를 바라보기 보다는 이슈에 따라 지자체의 추진이 진행 되고 있어 지자체와 연 구기관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2)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관련 관심 정도

- 실별 외국인, 다문화, 노동자, 자녀 등에 따라 나뉘어 있고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정 책 및 연구 등이 진행됨
- 이에 따라 중복지원 및 정책이 진행되기도 함

3) 지역의 외국인 정책 및 개선 사항 제시의 어려움

- 지자체의 실별에서 외국인 정책 등이 이루어져 지자체 연구원의 연 구는 지자체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정책의 문제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지자체 연구원의 주체로 지역의 외국인 정책 연구추진의 어려움

2. 지자체와 연구기관의 정보교류 지원

1)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 정보수집의 어려움

- 중앙과 지자체에서 추진하고자 정책의 정보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음
- 지자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등의 공유 부족
- 이러한 정보 부족으로 정부의 관심 이슈 등과 다른 지자체의 관심에 따라 지역의 정책이 진행되기도 함
- 지역의 연구기관 주체로 지역의 외국인 정책 연구추진의 어려움

2) 지역의 목적에 맞는 정책 추진

- 지역의 맞춤형 정책 개발 필요
- 지역 외국인의 구체적 욕구 등에 대한 정책 제시

3. 지역의 정책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포럼(세미나) 추진 및

1) 중앙부처에 지방의 외국인정책 제시 기회 부족

2) 중앙과 지자체의 현실적 논의로 지역에 맞는 정책 추진

토 론 문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운영방안

이종철(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과장)

MEMO

MEMO